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금융기관 NPL 운용 및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 은행권의 관리 방법 중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정책학과

이 승 철

2019년 6월 일

김 동 헌 교수지도  
석 사 학 위 논 문

금융기관 NPL 운용 및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 은행권의 관리 방법 중심 -

이 논문을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일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정책학과

이 승 철



이승철의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완료함.

2019년 6월 일

위 원 장 김 동 현



위 원 김 범 수



위 원 이 홍 식



# 목 차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3
<b>제2장 NPL의 개관</b> .....	5
제1절 NPL의 개요 .....	5
제2절 발생원인 .....	8
제3절 은행권의 NPL 관리 .....	12
제4절 부실채권의 정리 방법 .....	21
제5절 부실채권 시장 .....	23
제6절 부실채권 거래시장의 분류 .....	24
제7절 BIS 자기자본비율 .....	26
제8절 부실채권 매각 이유 .....	32
제9절 NPL의 경제적 영향 .....	34
<b>제3장 NPL 현황과 주요 이슈</b> .....	35
제1절 금융기관의 NPL 관련 현황 .....	35
1.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	35
2.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신규 발생 및 정리 현황 .....	36
3. 국내 은행의 부문별 부실채권비율 .....	38
4.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 .....	39
5. 국내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 .....	40
6.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	42
7.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 현황 .....	43



제2절 NPL 관련 주요 이슈 및 시사점 .....	44
1. 대출 관련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 .....	44
2. 전문 인력 부족 및 NPL 이해의 어려움 .....	45
3. 경영전략 부재와 과도한 매각 및 상각 .....	46
4. 부실채권 관련 영업점 성과평가 미흡 .....	47
5. 시사점 .....	48
 제4장 NPL 운용 및 관리 개선방안 .....	50
제1절 해외사례 및 시사점 .....	50
1. 미국 .....	50
2. 일본 .....	51
3. 스웨덴 .....	52
4. 시사점 .....	54
제2절 개선방안 .....	56
1.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AI 기능 도입) .....	56
2. 전문 인력 양성 및 NPL 자격증 제도 도입 .....	61
3. 매각 및 상각 리뷰 강화 .....	66
4. 부실채권 관련 영업점 성과평가 개선 .....	70
 제5장 결론 및 요약 .....	73
 참고문헌 .....	76



## 표 목 차

<표 1>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	6
<표 2> 위험가중치 .....	28
<표 3>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표 .....	29
<표 4> 경영개선 조치 내용 .....	30
<표 5>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	36
<표 6> 국내 은행의 신규 발생 부실채권 규모 추이 .....	36
<표 7>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실적 추이 .....	37
<표 8> 국내 은행의 부문별 부실채권비율 .....	38
<표 9>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 .....	39
<표 10> 국내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 .....	41
<표 11>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	42
<표 12>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 현황 .....	43
<표 13> 국내 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 추이 .....	43
<표 14> 주요 은행 여신 전문 인력 현황 .....	62
<표 15> 부서별 주요 자격증 보유 현황 .....	63
<표 16> 최근 3년간 신용분석사 신규 취득 현황 비교 .....	63
<표 17> 직무별 신용분석사 자격증 보유 현황 .....	64
<표 18> 여신 관련 주요 자격증 비교표 .....	65
<표 19> 주요 은행 대손충당금 현황 .....	67
<표 20> 미국 주요 은행 대손충당금 현황 .....	68
<표 21> 2018년 주요 은행 매각 및 상각 현황 .....	69
<표 22> 2018년 주요 은행 차주 구분별 매각 및 상각 현황 .....	69
<표 23> 2019년 4월말 주요 은행 차주별 연체 현황 .....	70
<표 24> 00은행 영업점 성과평가기준표 .....	71



## 그 립 목 차

<그림 1> 대출 상담과 심사시 AI 적용 프로세스 .....	60
------------------------------------	----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가계와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 거품까지 붕괴되면서 내수 기반이 무너져 더 큰 경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2018년 말 현재 국내 은행이 보유한 총여신은 1,872조원, 부실채권(기업+가계+신용카드) 규모는 약 18조원이며 기업여신이 16.3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부실채권중 상각된 채권은 6.8조원이다.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자산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심사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절한 차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부터 만약 연체가 발생하여 부실채권으로 될 경우 이의 효율적 처분과 자산가치 하락을 관리하는 단계까지 효과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예수금 관리, 여신 지원, 수출입 외환 업무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신용 창조 기능과 기업 운영자금 지원 및 산업설비 구입 자금 지원 기능,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가계대출 지원과 축소를 통한 부동산과 소비 수준 안정 기능 등 가계와 기업부문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금융 산업을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 영업을 통한 지속적 영업수익 확보와 사고 예방, 선제적인 부실여신 발생



억제와 부실여신 회수를 위한 효율적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 개발 체제하의 금융업은 정부 통제 하에 대량으로 여신을 기업에 지원케 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케 하였으나, IMF 체제하 기업의 부도와 이에 따른 거액의 부실여신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은 큰 손실을 보게 되어 대량의 통폐합, 실업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 활동을 영위하며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인 가계와 기업의 대량 부도로 인해 은행은 여신을 지원 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부실 여신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도 금융기관은 영업수익 확보를 위해 수신 업무는 물론 가계와 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신 지원 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자금인 부실여신(NPL)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영문 Non Performing Loan의 약자로 무수익 여신을 의미한다. 은행에서는 대출(Loan)을 하였으나 가계 혹은 기업 채무자의 이자연체로 인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익(Performing)이 발생하지 않는(Non) 대출채권 중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줄여서 NPL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부실채권은 무수익여신, 부실여신, 불량채권 등으로 불리어 지나 일반적으로 부실채권(NPL)이란 용어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와 채무자에 대한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민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서민·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 공공기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실채권의 개요를 바탕으로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여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NPL 운용과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부실채권을 사전에 차단하여 금융기관 경영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실채권(NPL)의 이론적 고찰과 부실채권 관리와 처리에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실채권과 관련된 제도인 경매제도 활성화, NPL 투자방법, 회수 실익 등 경매와 NPL 투자 방법 등 다소 비효율적이고 현실적 운영 관리와 거리가 먼 부실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기술된 기존의 논문과는 달리 금융회사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부실채권 운영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부실여신의 발생원인, 부실여신의 분류 방법, 자산을 매각하고 이를 개인 또는 기업에 판매하는 유동화 과정 등을 쉽게 풀어 해석하여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상각, 유동화, 자산매각, 투자실익 비교 등의 용어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하고 이해가 어려워 이를 쉽게 풀어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문헌으로는 연구논문과 단행본, 정기간행물 분석을 중심으로 관련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예금보호공사, 자산운용회사, 회계법인 등의 공시자료 조사와 부실채권 담당자와 면담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유사한 논문으로는 김하중(2015)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관리 방안-NPL과 경매 비교 연구”, 이용희(2006)의 “한국의 부실채권 정리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신세덕(2015)의 “NPL(부실채권)의 현황과 과제”등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문들은 주로 NPL 투자자 입장에서 경매 및 투자이론 등 수익 시현을 위한 실전 투자방법 등에 치중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관 부분에서 기존 논문을 통한 NPL 개요와 소개, 주요 용어, 업무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현황과 문제점 부분에서 금융회



사 입장에서 현상을 분석하여 효율적 관리와 회수에 대한 연구를 통한 문제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NPL(부실채권)의 개관으로 본 연구의 제목과 관련된 일반적 지식과 기존 논문을 근거로 한 이론적 고찰 부분이다. NPL의 개념과 발생원인, 은행권의 NPL 관리제도, 부실채권 정리방법, 부실채권 시장, 부실채권 거래시장 분류, BIS 자기자본비율,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이유, 경제적 영향 등을 개괄한다. NPL이 기업과 개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경제적 불안요인, 사회비용 증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NPL의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실제 부실여신 신규 발생 및 정리 현황, 부문별 부실채권 비율 등의 데이터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NPL 관리와 체계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이슈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 후 정책적 시사점과 논문이 의미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본 논문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를 기술하고 향후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최종 제시할 계획이다.



## 제2장 NPL의 개관

### 제1절 NPL의 개요

#### 1. NPL의 개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 또는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민법상에서 채권(債權)이라고 하며,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통해 발생한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않고 있는 부실채권인 무수익 여신을 NPL이라고 한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NPL이란 Non Performing Loan의 약자로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이자연체로 인해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 없는 대출채권 중 3개월 이상 이자연체중인 채권을 NPL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부실채권(NPL)의 범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출해준 자산 가운데 대출자의 경영 부실이나 부도 등에 의해 원리금의 상환이 불가능해진 자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실채권(NPL)은 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부 채권인 근저당채권과 무담보부 채권인 신용채권으로 나눈다.

이러한 금융회사 대출자산의 건전성은 ①정상, ②요주의, ③고정, ④회수의문, ⑤추정손실 등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부실채권은 정상을 제외한 나머지 4개(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라고 할 수 있다.

정상은 원리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상적인 여신이고, 요주의는 주의가 필요한 대출금으로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 연체되고 있는 여신을 말한다. 그리고 고정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여신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지만 담보가 있어서 나중에 회수가



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회수의문은 담보가 부족하여 어느 정도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여신을 말한다. 추정손실은 여신금액 대비 담보금액이 많이 부족한 경우로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신을 말한다.<sup>1)</sup>

<표 1>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구분	분류기준
정상	○ 금융 거래내용, 신용 상태 및 경영 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요주의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연체 대출금이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 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고정	○ 3개월 이상의 연체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금액 해당 여신
회수의문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서 대출처의 채무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악화돼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중 회수 예상금액을 초과하는 여신
추정손실	○ 연체기간 1년 이상으로 대출처의 상환 능력이 심각하게 나빠져 손실 처리가 불가피한 대출금 중 회수 예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자료: 금융감독원(2017)

## 2. NPL의 종류

부실채권은 채권관리의 주체에 따라 특별채권과 워크아웃채권, 일반채권 3가지로 분류되며, 담보유무에 따라 담보부채권, 무담보부채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채권의 분류는 주채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주채무자는 일반채권이고 보증인은 특별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채권으로 분류한다.<sup>2)</sup>

1) 강희경(2007), “국내 NPL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하나금융연구소, 2007.

2) 이영준 외 2인(2015), 『NPL의 정석』, 매일경제출판사.



### 가. 특별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규정에 따라 법원의 채무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 대한 채권을 말하며, 어음채권과 보증채권은 제외한다. 특별채권은 대부분의 업무용 부동산이나 시설이 법원에 의하여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단의 전체 결정에 따르게 된다.

특별채권은 담보부 특별채권과 무담보부 특별채권으로 나뉘며 내용은 일반채권과 같다.

### 나. 워크아웃 채권

금융기관과 워크아웃 약정(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한 대규모 기업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워크아웃 채권은 독자적 매각이나 처리를 할 수 없으며 채권단 전체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 다. 일반채권

특별채권과 워크아웃 채권에 속하지 않는 통상의 채권을 말하며 채권자 임의대로 처분이 가능한 채권이다.

#### (1) 담보부채권

금융기관의 매각대상 중 특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으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① 담보 : 담보란 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현금화 하여 대출금 회수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담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② 물적담보 : 채무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이 담보에 제공되고, 채권자는 그 물건 위에 우선 변제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물적담보의 대표적인 것으로 저당권이 있다.



③ 인적담보 : 채무자의 일반재산만이 아니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 사람의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채무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인적담보에는 보증채무, 연대채무가 있다.

## (2) 무담보부채권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처음으로 신용으로 취급하였거나 저당권 등 담보물건을 처분하였음에도 미회수된 채권이 남아 있어 채무관계인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채권 등을 말한다. 무담보부채권은 순수무담보부채권과 전환무담보부채권으로 나누어진다.

① 순수무담보채권 : 대출 취급 시부터 담보 없이 신용이나 보증으로 취급된 채권을 말한다. 예컨대 신용카드채권, 마이너스통장, 사업자금대출 등

② 전환무담보채권 : 대출 취급 시에는 담보로 취급하였으나, 담보를 처분 후 담보 부족분으로 인해 무담보로 전환된 채권을 말한다.

## 라. 채무자 채무개선 채권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채권, 신용회복채권, 사전채무조정채권이 있다. 이 채권은 부실이 발생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 조정, 연기 등 채무 개선을 통하여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채권이다.

## 제2절 발생원인

은행에서 대출금이 연체되거나, 채무자(차주)의 부도발생, 채무자의 사망, 회생절차, 신용회복절차, 파산절차 등이 진행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차주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부실여신 채권의 발생으로 인식하여 사후관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금융기관 자체의 내부적 요인과 정부 정책과 경기 변동에 따른 외부적 요인,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통화 위기 등의 대외적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구분되어 진다.

## 1. 내부적 요인

### 가. 비효율적인 대출 관련 관리시스템

금융기관의 고유 업무 중 하나인 여신은 부실채권 발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대출 심사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 정확한 신용 평가의 부족과 대출 후 차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부실채권을 양산하게 된다. 특히 업무량과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보니 규격화되지 못한 업무로 인한 담당자별 상이한 심사 방식과, 신용조사, 담보평가, 대출실행 후 사후관리와 매각 등의 업무에 있어 부실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

### 나. 무리한 외형 경쟁

금융기관의 순위 경쟁과 동일 금융기관내 손익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외형 확대와, 경영진의 임기 내 가시적 성과 거양을 위한 여신 증대의 양적팽창 위주의 경영, 유동성, 금리, 환율 변동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방만한 대출 및 차입 등은 부실 경영의 요인들이다.

금융기관의 외형 부풀리기 위주의 과다한 경쟁은 무리한 대출로 이어져 부실채권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 다. 전문 인력의 부족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차주의 상환 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신용조사를 하게 된다. 신용조사를 행하는 목적은 거래를 확대하여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 대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



시하는데, 이와 관련한 대출 심사 전문 인력과 대출 관리 전문 인력의 부족은 결국 부실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다.

또한 신용조사는 일정 금액 이하는 대부분 일선 영업점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본점 심사자의 교육은 자율 의사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전문화 교육을 통해 정교한 심사로 인해 사전적 부실여신 발생 억제가 필요하다.

#### **라. 금융기관의 경영전략의 부재**

금융기관 경영진은 단기간 임기 내 주어진 기간 동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체질 개선을 통한 장기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보다는 단기성 성과에 집중을 한다.

또한 감독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단기간에 BIS 자기자본비율 등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매각 및 상각을 진행하여 결국 수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장기적인 경영전략의 부재와 새로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실한 경영 계획과 위기 해결 능력의 부재는 금융기관 내에 부실채권 증가의 원인이 된다.

## **2. 외부적 요인**

#### **가. 정부 주도의 운영 체계**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는 정부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집행 과정을 통제하여 부족한 금융 자원을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배분함으로써 경제 성장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성공하였으나,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정부 주도의 운영 체계의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민간 부문이 정부 부문보다 정보력과 제도가 앞선 상황에서 규제와 제재는 오히려 민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건전성 보다는 규모 확대에 치중하였고, 비효율적 경영 관행이 지속되며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심화되어 금융시장 개방화와 국제화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 등으로 결국 관행적 여신 증가로 인해 부실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 나. 경기의 순환적 측면

부동산 담보에 주로 의존하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관행은 경기 침체 시기에는 부실여신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 가격의 급락으로 부실여신이 증가하게 된다. 즉, 대출의 수요자인 가계와 기업은 자산가치 하락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대출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지연시켜, 연체가 발생하고 결국 경매로 이어져 금융기관은 회수 금액이 대출금액보다 작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기 순환적 요인으로 인한 악순환이 발생하여 부실여신이 증가한다.

#### 다. 정부의 감독 기능의 미비

금융기관이 스스로 내부 통제를 하지 않거나 규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해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적 감독이 필요하다.

매각, 대손상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에 대한 정교한 기준 제시와 상시 감사 실시와 금융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정보 공개 및 은행 퇴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반 문제들을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여 해결하기



는 어렵기 때문이다.

### 3. 대외적 요인

금융기관 내적, 외적 요인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의 동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미국의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 양적완화 축소 및 최근의 유럽의 통화 위기, 브렉시트, 중국의 저성장과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악화는 결국 국내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나 침체시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국내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담보를 취득한 국내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이 증가하게 된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내 및 해외에서도 담보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어 세계 경기 침체는 결국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의 원인이 된다.

부실채권의 발생 및 증가의 원인 중에는 경기 순환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담보대출을 선호하는 은행은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부실채권을 오히려 더 많이 보유하게 된다.

## 제3절 은행권의 NPL 관리

### 1. 관리제도

은행에서 대출금이 연체되거나, 채무자(차주)의 부도 발생, 채무자의 사망, 회생 절차, 신용회복 절차, 파산 절차 등이 진행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차주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부실여신 채권 발생으로 인식하여 사후관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후관리 절차에는 각종 상환기일 안내 통지,



재산조사 실시, 법적절차 착수예정 통지, 법적절차 착수 실시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모두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효과를 얻고 있다.

채무자 사망 시 그 상속인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이나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조치를 하고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취득하고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유체동산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채무관계자의 예금상계, 보증채무 이행청구, 부동산의 임의경매 신청, 양도담보물의 처분 등 부동산 담보권이나 기타 담보권의 실행을 하게 된다.

채권회수 절차로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고, 보증채무 대위 변제금을 수령하고, 회수 예상액 및 회수 가액 정산 후 부실채권 확정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 처리 절차로 대손상각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사후관리는 영업점에서 먼저 내용증명을 통한 안내 등 기본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사후관리 부서로 이관 후 전담하여 실시하게 된다.

대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5년(상사채권)임을 감안하여 회수 할 실익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은 확정판결 등을 통해 시효연장을 하고, 회수 실익이 없을 경우 포기하게 되며 이때 최종적으로 잔존하게 되는 채권이 부실채권이 된다. 이러한 부실채권은 시효연장 관리를 하거나 외부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외부에 조기 매각하는 것이 NPL(Non Performing Loan)이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은 내부적으로 부실여신의 본부 집중 의뢰 및 부실여신 계정 이관제도를 통해 전반적인 부실여신 관리 및 계정 처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대출 연체금, 지급보증 대지급금, 중대한 권리침해 발생 등 초기 여신 사후관리 과정에서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본부에 여신 특수 관리를 대행토록 의뢰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실여신 본부로의 계정이관 대상은 월말 일자를 기준으로



연체일수 90일(3개월)이상, 부도로 인한 관리정보 등재, 기업회생 개시결정(법정관리 및 화의 기업체) 차주로,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된 차주를 대상으로 처리하게 된다.<sup>3)</sup>

앞에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선 영업점에서 부실을 인식하여 기본적인 사후관리(기일안내 및 접촉) 후 판단하여 사후관리 전담 부서로 부실여신을 이관하게 되는데 이때 점포별 개별 평가기준에 의거 부실발생 영업점의 손익이 차감되며 연체비율이 상승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실발생 영업점에서는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연체발생 지연과 영업점에서 자체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되지만 더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2. 대손충당금 적립

금융기관은 대출금 등 여신에 대한 손실 예상액을 산정하고 손실액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이를 통해 내부 유보 확대와 대손충당금을 재원으로 조기에 손실 처리하고 부실대출을 감축하여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의 차감 계정으로 적립하지 않으면 수익성과 건전성이 과대 공시됨으로써 경영 상태와 공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sup>4)</sup>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이나 어음 등의 매출채권 중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미회수액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이다. 은행이 돈을 빌려준 후 받은 돈의 일부는 회수하지 못 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금액을 미리 합리적으로 추정, 수익의 일부를

3) 김하중(2015), “금융기관 부실채권 관리방안”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하중(2015), 상계논문



충당해 뚫으로써 돈을 회수하지 못해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금이다.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에 따라 쌓아 두어야 하는데,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기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에 일정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쌓는다.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결산할 때 손실로 계상되기 때문에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은행은 대출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크면 높은 비율을 적립하고, 부실화 될 가능성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적립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출채권 및 여신성 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단계별로 최저 적립비율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보수적 회계 처리를 하여 평소에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하여 두어 영업이익이 작아지는 것은 경기가 악화 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부실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많아져서 영업이익이 작아지는 것은 자산건전성 유지에 좋지 않은 경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충당하고, 충당금이 남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을 하게 된다. 대손충당금 환입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며, 영업외수익 증가는 자본의 증가로 되어 BIS 자기자본비율의 상승효과와 경상이익의 증가로 나타난다. 반대로 처분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금융기관은 결산 시점에 부실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만큼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된다.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하게 되면 결산보고서에서 영업이익이 충당금 적립액 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충당금 적립이 더욱 부담스러운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것인지, 부실



채권을 매각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충당금을 적립하여 놓을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매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부실채권 매각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충당금 적립액으로 채권처분 손실을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환입이 있게 되고, 충당금 환입은 영업외수익 증가, 경상이익 증가, 자본증가, BIS 자기자본비율 증가로 나타난다.

부실채권 매각은 영업이익 감소를 방지하고, BIS 자기자본비율 증가라는 효과를 주는 장점으로 인해 금융기관은 결산시기에 맞춰 보유하던 부실채권을 집중적으로 매각하는 것이다.<sup>5)</sup>

### 3. 대손상각

금융기관에서 대손상각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며, 손실 처리된 채권은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에서 제외되어 재무상태표 외부계정인 대손상각채권으로 계정 처리한다. 대손상각은 외부매각, ABS 발행, 출자전환 등의 대내외 시장경제에 영향을 받는 요소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은행의 대손상각 관련 법규는 법인세법의 대손금 처리 조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중 금융감독원 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것은 대손금으로 인정하며, 대손 인정 시에는 추정손실로 분류되어야 하는 법률 조항을 따르고 있다.<sup>6)</sup>

5) 이영준 외 2인(2015), 『NPL의 정석』, 매일경제출판사.

6) 김하중(2015), “금융기관 부실채권 관리방안”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부실채권 매각 대상 자산의 선정

금융기관 등에서 채무자 소유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고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대출 원금 및 이자 등이 회수되지 않을 때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금액과 부실지급보증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수익여신이라고 한다. 일정 기간 이상 이자가 연체된 대출금이나 부도 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NPL로 분류된다.<sup>7)</sup>

부실채권의 매각자산 선정 업무 절차를 보면 매각 대상 자산을 선정할 때는 정상화가 어렵고 법적절차에 의해서 회수해야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매각업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요주의이하 부실채권부터 고정이하로 분류된 차주 권을 표본으로 추출하거나 대부분 고정이하의 부실채권을 대상으로 매각대상 선정이 이루어진다.

입찰일 이전까지 차주가 연체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상환하여 고정이하 여신에서 상향 분류가 예상되는 경우, 입찰일 이전에 경매 절차의 배당금 수령이 예상 가능한 경우, 경매 대상 담보물에 하자가 있어 경매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법원의 취하 또는 기각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매각 대상 채권에 대출 취급 당시에 하자가 있어 내부적으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물건에 중대한 사건발생(유치권, 임금채권과다 청구 등)으로 매각가격이 현저히 하락 예상되는 경우, 관련 대출이나 담보물과 연관되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결과에 따른 주요 이슈가 예상되는 경우 등 기타 은행이 절차나 필요에 의하여 매각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대보증인 현황 등 채무관계자 현황 관리는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성별,

7) 김동희(2018), 『적은 돈으로 부자 되는 지분경매 완성과 NPL 투자비법』, 채움과 사람들.



연령, 주소 등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내용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인 보증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소멸등록을 하여 추가로 추심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소송 및 보전처분 사건의 효율적 현황 관리 활동으로 소송 및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법원명, 사건번호 등을 철저히 기록하여 매각대상 자산의 실질 가치 평가를 인정받도록 해야 하고, 회수예상 가능액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입찰가격 산정에 반영되도록 관리한다.

매각대상 자산의 실사는 부실채권 매각 자문사로 선정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자산실사)를 진행하게 되며 은행은 정확한 자산실사 및 평가가 반영되어 성공적인 매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하고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 보증서, 사후관리서류 등 각종 중요채권서류, 매각대상자산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자산 실사에 빠짐없이 반영되게 하고, 별도로 사본을 준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자료 및 은행 보관용 여신서류 파일을 만든다.

은행 전산데이터 자료와 매각 자산의 대조 실사 후 매각 대상 차주에 대한 채권액을 확정하고, 경매 미개시 차주 관련 담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경매개시 차주 관련 담보물은 경매사건 기록을 열람,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유출되지 않게 삭제하고 소송 및 보전처분 진행건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입찰일까지 투자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준비한다.

입찰실시 및 낙찰자의 선정 절차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일에 최소 유보가격 이상의 금액을 입찰가격으로 써낸 입찰자 중 최고 가격을 제시한 적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임시 자산관리 수행은 낙찰자의 선정으로 매수인이 결정되면 은행은 거래종결일(매각대금 정산일)까지 통상의 법령, 내규에 따라 거래 종결일까지



양수할 매수인을 위하여 임시로 자산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그 외의 매각대상 자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결정이나 선택하는 사항은 매수인과 협의해야 한다.

매각대금 정산 및 계정 처리는 거래 종결일에 매각대금 잔금을 수령하고 매각대상 자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하여 매각대상 차주에 대한 모든 권리 등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채무자에게 배달증명부 내용 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한다.

채권양도 후에는 매각대상 차주의 채권자가 매수인으로 변경되므로 모든 절차는 매수인과 상담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은행의 재무제표에서 매각대상 자산을 제외시키고 전산자료를 삭제시키며 관련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매각자산 사후관리 정비는 매각자산에 하자가 있고 자산 양수도 계약서상의 소정의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인 은행이 하자를 보완하여야 한다. 만약 불가능 할 경우 매각자산을 환매하거나 금전적 조정을 계약서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하며 단순한 채무자와 민원 사유로 환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각채권 양도시 은행에서 등재한 은행연합회 신용관리 정보는 양도 사유로 해지하고 은행 매각차주 정보는 계속 관리한다.

채권 양도시 매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도 함께 이전하여야 하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전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매각 후 은행이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어도 근저당권의 권리자는 매수인으로 정하게 된다.<sup>8)</sup>

---

8) 김하중(2015), “금융기관 부실채권 관리방안”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부실채권 매각 대상 자산의 실질 조사

부실채권 매각 대상 자산의 실질 조사 절차는 부실채권 매각대상 채권이 원인 서류와 매각 관련된 여신채권 정보, 담보권 권리사항, 담보의 감정평가 정보 등에 대해서 정확성과 실질 가치의 평가를 하게 된다.

대출채권 실사는 매도자인 은행 입장의 적절한 평가와 대출채권 데이터의 정확성, 매각시 투자자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빠른 이해를 촉진시켜 매각절차가 빠른 시간 안에 종결되게 실시한다.

대출채권 원인서류(대출약정서, 조건변경약정서, 채무인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근보증약정서 등), 대출채권사항(대출계좌번호, 계정과목, 대출신규일, 대출만기일, 기준일 현재 원금잔액, 가지급금, 가지급금이자, 약정이자율, 연체이자율 등), 대출차주사항(대출차주명, 차주관리정보, 차주의 총 지연배상금), 대출관련 연대보증, 보증인정보(연대보증인명, 보증인 인적사항정보, 보증한도금액, 근보증종류, 담보의 기본정보 및 감정평가정보(부동산, 동산담보종류, 담보물유형, 담보물 수량, 담보물 소재지 등 최근 및 법원의뢰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담보물건 종류별, 과거일자의 낙찰률 등), 담보의 권리분석 및 경매 진행사항, 각 항목별 가치평가 실시 후 차주별로 대출채권 기본정보와 담보평가금액, 미수금액, 미상환원금 등을 종합평가하는 실지 조사를 수행한다.

기업회생절차 여신채권, 기업개선진행 여신채권의 평가방법은 현금흐름이 양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여신상황거래표의 대출채무 상환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현금흐름이 음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종 부도 예상시점을 추정하고 부도시점까지 여신의 현금상환 예상액과 부도를 예상하는 추정시점의 담보가치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회생절차 인가 받은 최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제기 도래 여부를 체크하고 법원 월간 보고서를 열람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원리금 변제여



부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영업추진 실적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M&A를 추진할지 청산배당을 추진할지 결정한다.<sup>9)</sup>

## 제4절 부실채권의 정리 방법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증가는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의 감소와 대외신인도 하락과 실물경제 흐름의 왜곡으로 나타나 결국 사회적 비용이 커지므로 감독기관과 해당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국제 입찰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sup>10)</sup>

### 1. 국제 입찰

자산보유자(은행)가 매각대상 부실채권을 선정하여 특성에 따라 분류, 몇 개의 군으로 묶거나 또는 일괄하여 경쟁 입찰 절차를 밟아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현재 부실채권 정리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실채권 매각방법이다.

투자자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투자자 명의로 저당권을 이전등기 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직접 매각방법이다. 그래서 매각단위도 1개씩 또는 수십 개씩 구성하여 국제입찰 방식으로 일괄 매각한다.<sup>11)</sup>

### 2. 자산담보부 증권(NPL ABS) 발행

자산보유자(금융기관)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 자회사에게 부실채권을 매

9) 김하중(2015), “금융기관 부실채권 관리방안”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이영준 외 2인(2015), 『NPL의 정석』, 매일경제출판사.

11) 김동희(2018), 『적은 돈으로 부자 되는 지분경매 완성과 NPL 투자비법』, 채움과 사람들.



각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는 부실채권을 담보로 ABS 증권을 발행하여 매각 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지급하여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현재 이 방식은 국제회계기준(IFRS)이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서 의무 적용에 따라 2010년 1월 이후 사문화 되었다.

### 3. 자산관리회사(AMC)의 합작 설립

부실채권 관련된 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회사와 투자자가 서로 합작하여 별도의 자산관리회사(AMC-Asset Management Company)를 설립하고, 이들 합작회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IMF 외환위기 당시에 이용되었던 방법으로 KAMCO와 Deutsche Bank, KAMCO와 Morgan Stanley가 합작 AMC를 설립하여 부실채권 정리에 사용한 경험이 있다.

### 4. PEF, CRV로 매각

간접투자 자산운용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개선사모투자회사(PEF-Private Equity Fund)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거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에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 5. 채권의 개별 매각

기업의 제3자 인수와 영업 중인 기업채권 개별 매각의 방법이 있다. 개별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법인 등을 자문사로 선정하여 매각업무를 추진하여 투명 공정하게 매각업무 처리를 하려하고 있다.



## 제5절 부실채권 시장

부실채권의 개념 정의에 따라 부실채권 시장의 크기도 차이가 있다.<sup>12)</sup>

### 1. 부실대출 시장(NPL 시장)

부실채권의 범위를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한정하는 경우의 부실채권이란 부실채권 가운데 금융기관이 담보처분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손실을 가져다주는 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행감독규정은 부실채권의 범위를 상기 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실채권 시장은 부실대출 시장만을 의미한다.

### 2. 부실채권 시장(고위험채권 시장)

부실채권의 범위를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보면 부실채권이란 금융기관이 대출해 준 자산 가운데 대출자의 경영부실이나 부도 등에 의해 원리금의 상환이 불가능해진 자산 전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광의의 개념에 의하면 부실채권은 고위험채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실채권 시장은 부실대출 시장과 고위험채권 시장으로 구성하게 된다.

### 3. 부실자산 시장(부실채권 시장+부동산 시장)

부실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에는 부동산과 연결되어 부실자산 시장을

---

12) 이영준 외 2인(2015), 『NPL의 정석』, 매일경제출판사.



형성한다. 이때 부실채권을 담보하는 부동산의 매매시장을 부동산 시장이라 할 수 있다.

#### 4. 부실기업 시장

인수대상이 대출이나 채권과 같은 특정자산이 아니라 기업 자체인 경우 부실기업 시장이라 한다.

#### 5. 구조조정 시장(부실자산 시장+부실기업 시장)

부실채권(Distressed Debt)시장은 Non-Performing Loans 시장과 Junk Bond(벤처기업이나 부실기업 같이 위험이 높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시장으로 구성된다.

부실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과 연결되어 부실자산 시장을 형성한다. 그러나 인수 대상이 자산이 아닌 기업 자체인 경우가 부실기업 시장이다. 따라서 구조조정 시장이란 부실자산 시장과 부실기업 시장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 된다.

### 제6절 부실채권 거래시장의 분류

부실채권 시장(NPL 시장)은 부실채권 거래 단계에 따라서 제1차 부실채권 시장, 제2차 부실채권 시장, 제3차 부실채권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13)</sup>

---

13) 이영준 외 2인(2015), 『NPL의 정석』, 매일경제출판사.





## 1. 부실대출 채권 제1차 거래시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여러 개로 POOL을 구성 후 POOL전체를 국제 입찰에 붙여서 매각하는 시장이며 매각 주체는 제1금융기관, 저축은행, 농/수/축협중앙회 등 이다.

국내 기관의 경우 매입 주체는 연합자산관리, 우리F&I,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등이며, 국외 기관은 Lone Star, GE Capital, 신세이뱅크 등이다. 매각 주체가 제1금융기관, 농/수/축협중앙회 등의 경우 채권규모는 OPB기준 약 50억~2,000억원, 채권 개수는 약 100개~500개로 근거법률로는 일반적으로 ABS법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OPB란 Outstanding Principal Balance의 약자로 현재 원금액의 의미로 각각의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의 채권계정일 현재의 원금액을 말하고 각각의 채권 풀에 관하여는 당해 채권풀상의 채권의 현재 채권금액 총액에 해당하는 채권계정일 현재의 금액을 말한다. 한마디로 “채권금액의 원금”을 의미하며, “원장부가”라고도 한다.<sup>14)</sup>

## 2. 부실대출채권 제2차 거래시장

1차 시장에서 낙찰 받은 기관투자자가 설립한 SPC(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일반투자자와 1개씩 채권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1차 시장을 도매시장으로 비유하면 2차 시장은 소매시장이라 할 수 있다.

SPC(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매각주체가 되며 SPC는 Paper Company로 실제 채권관리는 자산보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체인 자산관리회사(AMC)에서 한다.

14) NAVER 용어검색 "OPB" ID 내려놓자(2012.2.15.) 게시



매입 주체는 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가 된다.

채권 규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약 1,000만원~100억원, 채권개수는 1개~3개(일반적으로는 1개), 근거 법률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 3. 부실대출채권 제3차 거래시장

SPC(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의 채권을 매입한 채권 양수인이 매입한 부실채권을 제3자에게 채권을 재매각 하거나 법원경매 절차를 통하여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시장을 말한다.

2차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한 개인 투자자 또는 법인 투자자가 매각 주체가 된다. 매입 주체로 투자자 배당은 법원경매에서 낙찰자 또는 제3자에게 재매각으로 이루어지고, 투자자 유입은 2차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한 일반 투자자 본인이 된다.

채권매각 규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약 1,000만원~100억원이며, 채권개수는 1개~3개(일반적으로는 1개)이며 근거 법률로는 민법과 민사행정법이 적용되고 있다.

## 제7절 BIS 자기자본비율

### 1. 자기자본비율의 의미

일반적인 의미의 자기자본비율은 기업의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text{일반적인 자기자본비율} = \text{자기자본} / \text{총자산} \times 100\%$$

$$\Rightarrow \text{총자산} \uparrow (\text{증가}) \rightarrow \text{자기자본비율} \downarrow (\text{하락}) \quad (\text{식 1})$$



이는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다.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준비율은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좀 더 일반화된 용어로서의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sup>15)</sup>

BIS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약자이다.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1988년 7월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기업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흔히 활용되고 있는 자기자본비율을 금융기관의 영업 특성을 고려하여 약간 수정한 것이다.

이러한 BIS 비율이 떨어지면 은행의 신인도 하락으로 고객 이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은행 간 합병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sup>16)</sup>

$$\text{BIS 자기자본비율} = \text{자기자본} / \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Rightarrow \text{위험가중자산} \uparrow (\text{증가}) \rightarrow \text{BIS 자기자본비율} \downarrow (\text{하락}) \quad (\text{식 2})$$

## 2. 금융기관과 BIS 자기자본비율

금융기관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 산정시 분자인 자기자본과 분모인 총자산에 위험가중치를 감안하여 계산하는데, 이는 일반 기업체와 다르게 금융

15) NAVER 용어검색 "자기자본비율"

16) 이영준 외 2인(2015), 『NPL의 정석』, 매일경제출판사.



기관 특성에 맞게 위험성 높은 대출자산을 각각 가중치 별로 적용하여 합산한 자산을 산정하여 적용하는데 이러한 특성에 맞는 계산방법을 사용하여만 안정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자산은 일반 제조업의 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과 달리 각종 대출금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항상 상환불능 위험성이 수반되므로 분모인 총자산을 산정할 때 단순히 전체 자산을 합산하지 않고 자산별 위험가중치를 감안해 합산한다.

### 3. 위험가중자산

위험가중자산이라는 것은 대출금 별로 상환 불능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여 재산정한 것을 의미한다. 즉 같은 대출금이라도 대출 차주의 재무상황, 신용도, 담보 등의 상황에 따른 회수 가능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 것이 위험가중자산이다.

<표 2> 위험가중치

보유채권	위험가중치
중앙정부채권, 중앙은행채권, 현금보유	0%
국내 공공기관채권	10%
은행 간 채권	20%
주택담보대출채권	50%
주식 및 그 밖의 대출채권	100%
PF대출채권(PF대출비율이 30% 초과 시 초과분)	100%

자료 : 금융감독원(2017)

일반 신용대출과 주식운용 등 담보가 부족한 부문에 자금을 많이 운용



하게 되면 높은 위험가중치로 인해 분모 값이 커지게 되어 BIS 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지고, 중앙정부 채권이나 현금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낮은 위험가중치로 인해 분모 값이 작아지게 되어 결국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 4. 국내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 저축은행은 5%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IMF 이후 국내은행은 건전성관리를 철저히 하여 8%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부실 및 불법대출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자산건전성 하락, 부실대출 증가로 인해 2012년 ~ 2013년 사이에 많이 퇴출되었다.

<표 3>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표

구분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 (최소 자기자본비율)	비고
시중은행	8% 이상	IMF이후 국내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를 철저히 하여 8%를 상회
저축은행	5% 이상	저축은행은 부동산PF대출 부실 및 불법대출 등의 영향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여 2012~2013년 사이 많이 퇴출됨

자료: 금융감독원(2017)

#### 5. BIS 자기자본비율과 경영개선 조치

경영개선 조치란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전 규제로 금융감독당국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 경



영개선 요구, 경영개선 명령을 차등적으로, 순차적으로 내리게 된다. 참고로 저축은행 퇴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취한 실제 경영개선 조치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경영개선 조치 내용

구분	내용
경영개선 권고	저축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BIS 자기자본 비율이 5% 미만일 경우에 내려짐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 권고 보다 더 강화된 자기자본 기준이 적용되어 BIS 자기자본 비율이 3% 미만일 경우 취하는 조치
경영개선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또는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가 이행 계획을 이행 하지 않거나, 이행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내려짐</li> <li>-부실 저축은행에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인 것으로 경영개선 명령은 다시 세분하면 자본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는 경영개선계획 제출명령과 영업정지 명령으로 나뉜다.</li> <li>-금융감독원은 부실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을 검토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는 반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저축은행을 파산시키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li> <li>-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가 되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거나 예금보호한도(1인당 5천만 원) 이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li> </ul>

자료: 금융감독원(2016)

## 6. BIS 자기자본비율과 부실채권 매각

### 가.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법

$$\text{BIS 자기자본비율} = (\text{자기자본} \div \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quad (\text{식 } 3)$$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자인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또는 분모인 위험가중 자산을 줄여야 한다. 분자인 자기자본을 늘리기 위해서는 증자 또는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다. 분모 부분인 위험가중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가중치가 높은 주식매각, 서민대출금 회수와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분모인 위험가중 자산이 감소되어 BIS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 나. 부실채권 매각과 BIS 자기자본비율

경기 침체 상황이거나 또는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아 영업이익이 많지 않을 경우 대규모 유상증자 혹은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분자인 자기자본을 늘려서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분모 부분의 위험자산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여 적절한 BIS 자기자본비율 수준을 맞추게 된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자기자본을 높이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는 하지만, 경기침체 상황이거나 주식시장의 상황도 좋지 않을 경우 주식매각을 통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어렵다.

위험가중치가 상대적 높은 대출금을 회수하여 위험 가중치가 낮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거액의 대출금 회수는 은행의 지속적 수익성 확보에 차질을 주고 무리한 대출금 회수는 금융기관의 경영 부실의 책임을 대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인식하여 고객 및 여론의 반발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은 부작용과 반발이 없어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 제8절 부실채권 매각 이유

### 1. 금융기관의 안정성 저해 방지

금융기관이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능력을 갖추는 것을 금융기관의 안정성이라고 한다.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자기자본이 일정할 때 총여신 중 위험성이 높은 여신의 구성비가 늘어나면 BIS 자기자본비율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총액이 같다 하더라도 부실채권의 증가는 자기자본 비율을 감소시켜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sup>17)</sup>

### 2. 금융기관의 유동성 제약 해소

금융기관은 경제 주체의 경제행위 시 교환 수단 및 지급결제 수단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예금을 수취하여 여신을 제공한다. 부실채권이 증가하면 일차적으로 자금운용의 제약을 받게 되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sup>18)</sup>

### 3. 금융기관의 수익성 감소 억제

금융기관은 장래의 위험이나 자금부담에 대비하여 제 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쌓아야 한다. 그런데 부실채권의 누적은 대손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

17) 이영준 외 2인(2015), 『NPL의 정석』, 매일경제출판사.

18) 이영준 외 2인(2015), 상계서





높여 당기순이익을 떨어뜨리게 되고, 대출금의 이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해당 자금의 조달금리 만큼은 해당 금융기관의 손해가 된다.<sup>19)</sup>

#### 4. 금융비용의 증가 방지

부실채권을 사후 관리하는 관리 직원은 대출금 회수에 추가적인 검토와 관리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사후관리의 인건비 외에도 법적 비용의 증가 등 업무처리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sup>20)</sup>

#### 5. 대외 신용도 저하 방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과다 보유시 대외 신용도가 하락한다. 이는 금융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선진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이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본규모, 서비스 수준 및 금융 기법에서 열세인 국내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의 과다는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국내외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불리하다. 특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과다 보유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조달금리를 상승시키게 된다.<sup>21)</sup>

---

19) 이영준 외 2인(2015), 『NPL의 정석』, 매일경제출판사.

20) 이영준 외 2인(2015), 상계서

21) 이영준 외 2인(2015), 상계서



## 제9절 NPL의 경제적 영향

### 1. 경제의 불안 요인

금융은 경제의 혈액과 같은 것으로써 자금 중개기능과 결제기능, 신용창조기능을 통하여 실물경제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자금 초과수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실채권의 증가는 경제 주체의 자금 수요에 대한 적기 공급을 어렵게 하고,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소극적인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에 전반적인 자금 경색의 결과를 가져와 경제 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sup>22)</sup>

금융 감독 당국의 관리와 감독의 소홀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대량의 부실이 발생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그에 따른 파급효과와 피해는 사회와 경제 전반에 실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부실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과 정책자금 지원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한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국민 부담과 사회 불안 및 불만 요인이 된다.

### 2. 사회적 비용의 증가 요인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대출해 준 금융기관의 자본이 잠식되어 자금을 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리스크를 정부나 개인과 기업에 전가 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 될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만성적인 자금 초과수요로 있었던 상황이었다. 부실채권은 은행의 자금운용 흐름에 제한을 가하여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22) 이영준 외 2인(2015), 『NPL의 정석』, 매일경제출판사.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정부부담, 즉 국민 전체의 조세 부담으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사회 전체적인 효율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기업 측면에서는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특히 생산비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에게 미치는 負의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진다.<sup>23)</sup>

## 제3장 NPL 현황과 주요 이슈

### 제1절 금융기관의 NPL 관련 현황

#### 1.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18년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0.97%로 전분기말(0.96%) 대비 0.01%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기말(1.19%) 대비 0.22%p 하락하였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8.2조원으로 전분기말(17.8조원) 대비 0.4조원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16.3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계여신(1.7조원), 신용카드채권(0.2조원) 順이다.

---

23) 남맹효(2012),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학위논문.



<표 5>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단위 : 조원, %, %p)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증감	
	12말	3말	6말	9말	12말	3말	6말	9말	12말 (a)	3말	6말	9말 (b)	12말 (c)	연간 (c-a)	분기 (c-b)
부실채권 계	30.0	31.3	30.4	29.1	24.6	23.7	21.8	20.5	21.1	21.1	19.4	17.8	18.2	△30	0.4
기업여신 <sup>1)</sup>	27.9	29.2	28.4	27.0	22.8	21.7	20.0	18.7	19.4	19.3	17.6	16.0	16.3	△31	0.3
가계여신	1.9	2.0	1.9	1.9	1.7	1.8	1.6	1.6	1.6	1.6	1.6	1.6	1.7	0.1	0.0
신용카드	0.1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0	△0.0
총여신	1664.3	1,673.8	1,696.6	1,700.1	1,732.9	1,721.8	1,744.5	1,774.0	1,775.9	1,783.7	1,821.7	1,852.3	1,872.6	96.7	20.3
부실채권 비율 <sup>2)</sup>	1.80	1.87	1.79	1.71	1.42	1.38	1.25	1.15	1.19	1.18	1.06	0.96	0.97	△0.22	0.01
<sup>3)</sup>	112.0	110.7	119.6	123.9	82.7	84.0	82.9	90.9	93.7	102.0	102.7	110.1	104.9	11.3	△5.2

주: 1) 공공·기타부문 포함, 2) (고정이하여신)/(총여신), 3) (총대손충당금잔액)/(고정이하여신) (이하 동일)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3.8.)

'18년말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대손충당금 적립률 = 총대손충당금잔액 / 고정이하여신)은 104.9%로 전분기말(110.1%) 대비 5.2%p 하락하였으며 전년동기말(93.7%) 대비 11.3%p 상승하였다.

## 2.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신규 발생 및 정리 현황

<표 6> 국내 은행의 신규 발생 부실채권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Q중	2Q중	3Q중	4Q중	계	1Q중	2Q중	3Q중	4Q중	계	1Q중	2Q중	3Q중	4Q중 <sup>3)</sup>	계
신규발생	28.1	7.0	8.2	4.4	5.6	25.2	3.9	3.9	3.5	5.9	17.2	3.9	4.0	3.6	7.1	18.6
기업여신 <sup>1)</sup>	24.9	6.3	7.5	3.6	4.9	22.3	3.2	3.3	2.8	5.2	14.6	3.2	3.3	2.8	6.3	15.6
(대기업) <sup>2)</sup>	14.4	3.9	4.5	1.1	2.4	11.9	0.8	0.7	0.7	2.7	4.8	1.0	1.3	0.8	3.8	6.9
(중소기업)	10.5	2.4	3.0	2.5	2.5	10.4	2.4	2.6	2.2	2.6	9.7	2.1	2.0	2.0	2.5	8.6
가계여신	2.8	0.6	0.6	0.6	0.5	2.3	0.6	0.5	0.5	0.6	2.2	0.6	0.6	0.6	0.7	2.5
(주담대)	1.0	0.2	0.2	0.2	0.2	0.8	0.2	0.2	0.2	0.2	0.7	0.2	0.2	0.2	0.2	0.9
신용카드	0.5	0.1	0.1	0.1	0.1	0.5	0.1	0.1	0.1	0.1	0.5	0.1	0.1	0.1	0.1	0.5

주: 1) 공공·기타부문 포함, 2) 기업여신 중 중소기업여신 제외분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3.8.)



‘18년중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18.6조원으로 전년(17.2조원) 대비 1.4조원 증가하였다. 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15.6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년(14.6조원) 대비 1.0조원 증가하였다.

가계여신 신규 부실은 2.5조원으로 전년(2.2조원) 대비 0.3조원 증가하였다.

<표 7>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실적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15년 계	'16년					'17년					'18년				
			1Q중	2Q중	3Q중	4Q중	계	1Q중	2Q중	3Q중	4Q중	계	1Q중	2Q중	3Q중	4Q중	계
정리실적		22.3	5.6	9.1	5.7	10.0	30.4	4.9	5.8	4.8	5.2	20.7	3.9	5.7	5.2	6.7	21.6
형태별	대손상각	7.5	1.9	3.1	1.7	3.1	9.8	1.2	1.5	1.0	1.9	5.6	0.9	2.0	1.2	2.7	6.8
	매 각	5.2	0.4	2.1	0.9	1.3	4.7	0.6	1.5	0.6	1.6	4.2	0.6	1.2	0.8	1.6	4.2
	담보처분	5.1	2.0	2.5	1.8	2.0	8.3	1.9	1.4	2.4	1.3	7.1	1.8	1.3	1.3	1.5	5.8
	정상화	3.5	0.7	1.0	0.7	1.1	3.5	0.5	1.1	0.5	0.3	2.4	0.3	1.1	1.8	0.6	3.8
	기 타 <sup>1)</sup>	0.8	0.6	0.4	0.6	2.5	4.1	0.8	0.2	0.3	0.1	1.4	0.2	0.2	0.1	0.5	1.0
부분별		18.5	5.0	8.2	5.0	9.2	27.4	4.3	5.1	4.1	4.5	17.9	3.3	5.0	4.4	6.0	18.7
	(중소기업)	11.6	2.3	3.9	2.5	3.3	12.0	1.9	3.3	2.1	3.3	10.5	1.9	2.5	1.8	2.4	8.6
	가계여신	3.4	0.5	0.7	0.6	0.7	2.5	0.5	0.6	0.5	0.6	2.3	0.5	0.6	0.6	0.6	2.5
	신용카드	0.5	0.1	0.1	0.1	0.1	0.5	0.1	0.1	0.1	0.1	0.5	0.1	0.1	0.1	0.1	0.5

주: 1) 출자전환 등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3.8)

‘18년 중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21.6조원으로 전년(20.7조원) 대비 0.9조원 증가하였다. 정리 형태로는 대손상각 6.8조원, 담보처분 5.8조원, 매각 4.2조원, 여신정상화 3.8조원 순이다.



### 3. 국내 은행의 부문별 부실채권비율

<표 8> 국내 은행의 부문별 부실채권비율

(단위 : %, %p)

구분	'15년말	'16년				'17년				'18년				증감	
		3말	6말	9말	12말	3말	6말	9말	12말 (a)	3말	6말	9말 (b)	12말 (c)	연간 (c-a)	분기 (c-b)
<b>부실채권비율</b>	1.80	1.87	1.79	1.71	1.42	1.38	1.25	1.15	<b>1.19</b>	1.18	1.06	0.96	<b>0.97</b>	△0.22	0.01
기업여신 <sup>1)</sup>	2.56	2.67	2.59	2.49	2.06	1.99	1.81	1.67	<b>1.76</b>	1.75	1.56	1.40	<b>1.43</b>	△0.33	0.03
(대기업) <sup>2)</sup>	3.76	4.06	4.14	4.03	3.15	2.93	2.70	2.38	<b>2.85</b>	2.84	2.46	2.02	<b>2.10</b>	△0.75	0.08
(중소기업)	1.64	1.63	1.46	1.44	1.30	1.38	1.24	1.23	<b>1.11</b>	1.13	1.04	1.04	<b>1.05</b>	△0.06	0.01
개인사업자	0.50	0.52	0.49	0.51	0.45	0.48	0.44	0.42	<b>0.36</b>	0.38	0.35	0.37	<b>0.36</b>	△0.00	△0.01
가계여신	0.35	0.36	0.32	0.31	0.28	0.28	0.26	0.25	<b>0.24</b>	0.25	0.24	0.23	<b>0.23</b>	△0.01	0.00
(주택담보대출)	0.28	0.27	0.25	0.24	0.22	0.22	0.20	0.19	<b>0.18</b>	0.19	0.19	0.18	<b>0.17</b>	△0.01	△0.01
(신용대출등)	0.51	0.56	0.48	0.47	0.42	0.46	0.41	0.41	<b>0.38</b>	0.38	0.36	0.36	<b>0.36</b>	△0.02	0.00
신용카드	1.14	1.40	1.34	1.35	1.34	1.46	1.28	1.28	<b>1.28</b>	1.39	1.33	1.34	<b>1.20</b>	△0.08	△0.14

주: 1) 공공·기타부문 포함, 2) 기업여신 중 중소기업여신 제외분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3.8)

‘18년말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0.23%)은 전년말(0.24%) 0.01%p 하락하였고 전분기말(0.23%)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비율(0.17%)은 전년말(0.18%) 대비0.01%p 하락하였으며, 전분기말(0.18%) 대비 0.01%p 하락하였다. 기타 신용대출 부실채권 비율(0.36%)은 전년말(0.38%) 대비 0.02%p 하락하였고, 전분기말(0.36%)과 비슷한 수준이다.

‘18년말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20%)은 전년말(1.28%) 대비 0.08%p 하락하였고, 전분기말(1.34%) 대비 0.14%p 하락하였다.



#### 4.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

<표 9>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

(단위 : 조원, %, %p)

은행	'17.12말			'18.9말			'18.12말 <sup>P</sup>			증감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연간 (C-A)	분기 (C-B)
		금액	비율(A)		금액	비율(B)		금액	비율(C)		
신 한	219.2	1.2	0.55	232.0	1.1	0.47	236.6	1.1	0.45	△0.10	△0.02
우 리	222.1	1.8	0.83	228.7	1.0	0.46	233.9	1.2	0.51	△0.32	0.05
S C	37.2	0.2	0.60	37.7	0.2	0.45	37.7	0.2	0.46	△0.14	0.01
하 나	217.3	1.6	0.73	231.3	1.3	0.55	232.0	1.2	0.52	△0.21	△0.03
씨 티	24.2	0.1	0.57	23.7	0.2	0.64	23.2	0.2	0.70	0.13	0.06
국 민	249.4	1.5	0.58	270.5	1.3	0.48	274.5	1.3	0.48	△0.10	△0.00
시중은행	969.4	6.4	0.66	1,023.8	5.0	0.49	1,037.9	5.1	0.49	△0.17	△0.00
대 구	36.0	0.3	0.82	36.7	0.3	0.78	36.9	0.3	0.90	0.08	0.12
부 산	39.6	0.6	1.53	40.9	0.5	1.29	41.4	0.6	1.43	△0.10	0.14
광 주	18.9	0.1	0.60	18.6	0.1	0.51	17.9	0.1	0.63	0.03	0.12
제 주	4.5	0.0	1.09	4.7	0.0	0.46	4.8	0.0	0.49	△0.60	0.03
전 북	14.0	0.1	0.87	14.2	0.1	0.82	14.0	0.1	0.71	△0.16	△0.11
경 남	29.7	0.3	0.89	30.9	0.3	0.93	30.7	0.3	1.11	0.22	0.18
지방은행	142.6	1.4	1.01	145.9	1.3	0.92	145.7	1.5	1.03	0.02	0.11
케 이	0.9	0.0	0.05	1.2	0.0	0.46	1.3	0.0	0.67	0.62	0.21
카카오	4.6	0.0	0.02	7.8	0.0	0.12	9.1	0.0	0.13	0.11	0.01
인터넷은행	5.5	0.0	0.02	9.0	0.0	0.17	10.3	0.0	0.20	0.18	0.03
일반은행	1,117.5	7.9	0.71	1,178.7	6.4	0.54	1,194.0	6.6	0.56	△0.15	0.02
산 업	123.8	4.3	3.49	121.3	3.0	2.47	121.7	5.2	4.23	0.74	1.76
기 업	194.7	2.6	1.36	204.8	2.7	1.34	206.2	2.7	1.32	△0.04	△0.02
수출입	108.2	3.9	3.64	105.3	3.4	3.23	104.4	1.6	1.49	△2.15	△1.74
농 협	206.1	2.1	1.03	213.3	2.0	0.94	216.4	1.9	0.89	△0.14	△0.05
수 협	25.7	0.2	0.90	29.0	0.2	0.79	29.9	0.2	0.56	△0.34	△0.23
특수은행	658.4	13.2	2.01	673.6	11.4	1.69	678.6	11.5	1.70	△0.31	0.01
국내은행	1,775.9	21.1	1.19	1,852.3	17.8	0.96	1,872.6	18.2	0.97	△0.22	0.01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3.8)



‘18년말 시중은행 총여신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順이지만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씨티, 하나, 우리 順이며,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인터넷 은행과  
특수 은행 포함한 국내 은행 전체 전년말 대비  $\Delta 0.22$  감소하였다.

#### 5. 국내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

‘18.9월말 국내 은행 자기자본비율은 다음 <표 10> 국내 은행의 자기자  
본 비율 현황에서 볼 때 신한은행 16.41%, 우리은행 15.88% 등 국내 은행  
전체 15.55%로 동년 6월말 15.51 대비 0.04%p 상승하였으며, 특수 은행은  
14.79%로 동년 6월말 대비 -0.04%p 감소하였다. 참고로 미국 상업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4.4% 수준으로 미국 국내 은행 대비 국내 은행은 양호한  
수준이다.





<표 10> 국내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

(단위 : %, %p)

은행	'18.6월말 (A)				'18.9월말 <sup>B</sup> (B)				증감 (B-A)			
	총자본비율		단순기본 자본비율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자본 총자본비율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자본 총자본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신한	13.24	13.53	16.18	5.75	13.32	13.61	16.41	5.86	0.08	0.08	0.23	0.11
우리	11.15	12.96	15.26	5.23	11.36	13.40	15.88	5.43	0.20	0.44	0.62	0.20
SC	14.94	14.94	14.94	5.79	15.54	15.54	15.54	5.85	0.60	0.60	0.60	0.05
하나	13.92	14.03	16.40	6.03	14.06	14.17	16.51	6.06	0.14	0.14	0.11	0.03
씨티	18.11	18.11	18.74	11.09	17.00	17.00	17.72	10.48	△1.11	△1.11	△1.02	△0.60
국민	14.87	14.87	15.92	6.51	14.71	14.71	15.72	6.54	△0.16	△0.16	△0.20	0.02
대구	11.83	13.15	14.84	6.69	11.89	13.53	15.11	7.04	0.06	0.37	0.27	0.35
부산	12.79	13.85	16.45	7.89	12.91	13.96	16.39	7.89	0.12	0.11	△0.06	0.00
광주	12.78	13.39	16.74	6.01	12.71	13.30	16.31	6.18	△0.07	△0.09	△0.43	0.18
제주	9.60	10.96	14.66	6.78	9.42	10.73	14.19	6.77	△0.17	△0.23	△0.47	△0.01
전북	10.92	10.96	14.14	6.10	11.04	11.10	14.11	6.35	0.13	0.13	△0.03	0.25
경남	11.81	13.53	16.70	7.14	11.85	13.53	16.58	7.16	0.04	0.01	△0.12	0.03
케이뱅크	-	10.15	10.71	6.72	-	10.72	11.32	6.70	-	0.58	0.61	△0.02
카카오	-	16.53	16.85	10.49	-	15.34	15.67	9.44	-	△1.19	△1.18	△1.05
산업	13.28	13.28	15.45	11.20	13.03	13.03	15.16	11.73	△0.25	△0.25	△0.29	0.53
기업	10.27	11.95	14.23	6.24	10.31	11.96	14.57	6.30	0.04	0.01	0.34	0.07
수출입	11.95	11.95	13.61	10.37	12.11	12.11	13.76	10.51	0.16	0.16	0.15	0.14
농협	12.70	12.97	15.85	4.30	12.52	12.78	15.53	4.24	△0.18	△0.19	△0.32	△0.06
수협	10.84	11.82	14.00	6.51	10.99	11.95	14.03	6.55	0.14	0.13	0.03	0.04
일반은행	13.45	14.02	16.02	6.19	13.47	14.08	16.12	6.25	0.02	0.06	0.10	0.06
시중은행	13.66	14.14	16.05	6.07	13.68	14.20	16.18	6.12	0.02	0.06	0.13	0.05
지방은행	12.05	13.17	15.82	6.98	12.10	13.29	15.78	7.13	0.06	0.12	△0.04	0.15
인터넷은행	-	15.58	15.93	9.95	-	14.67	15.04	9.05	-	△0.91	△0.89	△0.90
특수은행	12.08	12.60	14.83	7.41	12.01	12.52	14.79	7.49	△0.07	△0.08	△0.04	0.08
국내은행	12.86	13.42	15.51	6.62	12.84	13.42	15.55	6.69	△0.02	△0.00	0.04	0.07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3.8)



## 6.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표 11>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단위 : %, %p)

은행	'17.9말	'17.12말(A)	'18.9말(B)	'18.12말 <sup>P</sup> (C)	증감	
					연간(C-A)	분기(C-B)
신 한	104.6	114.0	142.7	141.8	27.8	△0.9
우 리	95.7	87.7	127.1	119.4	31.7	△7.7
S C	157.2	142.0	188.7	184.1	42.1	△4.6
하 나	78.8	75.9	84.1	91.5	15.6	7.4
씨 티	154.0	146.6	209.4	197.9	51.3	△11.5
국 민	92.7	99.7	122.0	122.3	22.6	0.3
대 구	73.4	81.4	86.4	87.8	6.4	1.4
부 산	88.1	86.8	88.9	91.3	4.5	2.4
광 주	79.8	69.3	109.9	92.9	23.6	△17.0
제 주	27.2	40.6	112.4	102.2	61.6	△10.2
전 북	47.3	44.1	56.2	65.1	21.0	8.9
경 남	63.1	77.7	88.4	86.0	8.3	△2.4
케 이	4,223.1	1,029.2	215.3	170.0	△859.2	△45.3
카카오	32,960.3	2,117.1	268.0	266.4	△1,850.7	△1.6
산 업	105.7	95.9	130.5	82.7	△13.2	△47.8
기 업	88.1	84.4	93.0	92.1	7.7	△0.9
수출입	86.2	105.9	108.3	164.6	58.7	56.3
농 협	70.0	78.6	86.3	94.0	15.4	7.7
수 협	140.8	126.6	125.3	156.2	29.6	30.9
국내은행	90.9	93.7	110.1	104.9	11.2	△5.2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3.8)

'18년말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인터넷 은행, 씨티, SC순으로 높았으며 인터넷 은행과 특수 은행 포함한 국내 은행 전체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제주은행, 씨티은행 등 대폭 증가 포함 전년말 대비 11.2%p 증가하였다.



## 7.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 현황

<표 12>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 현황

(단위 : 조원, %, %p)

구분	'18.6월말(A)	'18.9월말(B)	증감(B-A)
고정이하여신비율(A)	0.93	0.83	△0.10
총여신(A)	1,706.4	1,738.1	31.7
고정이하여신(B)	15.9	14.3	△1.6

자료: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2018.10)

'18.9월말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83%로 전분기말 대비 0.10%p 하락하였다. 이는 고정이하여신(14.3조원)의 매각 및 상각 등 부실채권 정리로 인해 전분기말 대비 1.6조원 감소하였고, 총여신(1,738.1조원)도 31.7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3> 국내 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 추이

(단위 : 조원, %, %p)

구분	'14.12	'15.12	'16.12	'17.12	'18.3	'18.6	'18.9
비율	1.52	1.68	1.18	1.03	1.02	0.93	0.83

자료: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2018.12)

'18.9월말 국내 은행 고정이하여신 추이는 '17.12월말 1.03%, '18.6월말 0.93%로 감소 추세이다.



## 제2절 NPL 관련 주요 이슈 및 시사점

### 1. 대출 관련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하나인 대출 업무는 부실채권 발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점에서 대출 심사를 함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 정확한 신용평가의 소홀과 대출 행위 후 차주에 대한 효율적 관리시스템의 부재는 부실채권을 많이 양산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새로운 전산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대출 관련 상담, 서류 접수, 신용조사, 담보평가, 심사, 대출 승인 및 실행, 사후 관리 등의 절차에 있어 아직까지 일련의 표준화 및 자동화가 진행되어 있지 못하고 직원이 직접 판단하여 해당 차주 또는 담보 물건지를 실제 방문하여 개별로 상담하고 신용조사하고 심사하고 있다.

특히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 절차는 연체 독촉, 법적절차서류 발송, 경매 등 법적절차 착수, 대출금 회수까지 실제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건이 수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특히 기업여신의 경우 관리시스템은 효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금융업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감독기관의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금융혁신과 개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IT,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제도와 조직, 구성원들의 사고의 혁신적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AI 등 인공지능과 금융이 융복합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출 상담에서 신용조사, 담보 평가, 대출 심사, 대출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물 흐르는 듯한 업무 개념 정립과 효율적 관리시스템과 과거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부실채권 발생 사례를 유형화,



리스트화하여 프로그램화 시켜 최초 대출 상담시 또는 심사시 필터링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 2. 전문 인력의 부족 및 NPL 이해의 어려움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차주의 상환 능력, 담보력,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신용조사를 하게 된다. 신용조사를 행하는 목적은 거래를 확대하여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 대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출 전문 심사 전문 인력과 대출 관리 전문 인력 부족은 부실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다.

특히 대출 심사를 위한 신용조사의 경우 대출 심사의 기초 작업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용조사는 영업점 신용조사와 본부 신용조사로 나뉘는데, 영업점 신용조사는 은행별로 상이 하지만 대략 총여신 30억, 보증/신용부 10억 이하 여신의 경우 해당 영업점 담당자가 신용조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대표자 평점 입력, 재무제표 및 장단기차입금 등 입력, 재무상황과 거래상황, 담보여력 등을 기준표에 의거 입력하면 최종 해당 업체에 대한 신용평점과 신용등급이 산정이 된다. 이를 근거로 지점에서는 업체 신용등급과 해당 지점장이 취급할 수 있는 전결 한도를 판단하여 자체 심사 후 대출 실행을 하든지 또는 본부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여신 사후관리는 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법적절차 착수, 경매 등의 특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신 사후관리 역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적 양성 과정이 활성화 되어있지 못하다. 따라서 신용조사 전담자 및 전담부서, 사후관리 전문가를 위한 별도의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NPL에 대해 일반인이 투자시 채권 현황과 담보부동산 가치 분석을 하는데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지 않아 투자 물건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이 어렵고, NPL 투자에 대한 거래 창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경매투자자가 직접 NPL 투자회사의 정보를 나름대로 수집하여 자산 관리자와 협상하여 수익계약으로 거래하는 등 경매투자자들이 NPL 투자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 경매투자자는 매매 방법이 일반화되지 못해 정보 접근이 어려워 정보 분석이 안 되어 결국 낙찰받기 힘들다. 또한 부실채권 정리가 금융회사의 신속한 채권회수와 건전성 유지가 주된 목적이 되면서 부실채권의 정리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이 NPL을 용이하게 구입하기 위해 부동산의 가치 평가와 NPL의 채권자 정보가 세부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채권정보, 담보 부동산의 선순위 채권, 법률적 제한사항 등의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어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NPL 전문 중개 및 판매회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NPL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NPL관리사(가칭) 자격증을 만들어 NPL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경영전략 부재와 과도한 매각 및 상각

경영전략의 부재와 새로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실한 경영 계획 및 위기 해결 능력의 부재는 금융기관 내에 부실채권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부실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어 부실여신 판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실채무의 만기연장 및 추가대출 제공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더 큰 부실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부실여신 발생 시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부실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인한 경영지표 악화 우려, 외부 언론에 유출시 은행에 대한 이미지 및 대외 신인도 하락, 감



독기관 감독 강화, 경영진 문책 등으로 이어져 사고발생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이를 은폐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결국 확대된 리스크로 이어져 은행의 경영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연말에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한 부실채권의 매각 및 상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4. 부실채권 관련 영업점 성과평가 미흡

대출채권이 이자 연체가 발생하여 부실 채권화 하기전 차주에 대하여 먼저 접촉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법적절차 착수 통지와 법적절차 실시 등이 이루어진 후 실효가 없어 보이면 본점 사후관리 부서로 연체대출을 이관을 하는데 이때 연체로 인해 해당 받지 못한 이자 부분은 손익에서 차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연체비율에 따라 성과평가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체 발생을 줄이고 부실채권을 신속히 회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망이 없을 경우 신속히 본점의 전담부서에 이관을 의뢰하여 처리함이 옳지만, 영업점에서는 해당 연체사실과 부실을 가급적 은폐하여 영업점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연체가 더욱 고정화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연체관리와 본점 전담부서로의 신속한 이관을 위해 이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신속하게 사후관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실여신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연체비율에 대한 점수 차감, 해당 미수 이자수익에 대한 불이익 등을 보다 정교하게 적용하여 실질적 사후관리와 영업점 평가가 이루어 져야한다.

현재는 부실채권과 관련된 영업점 성과평가 항목이 연체율과 자산건전성



밖에 없다. 따라서 부실채권의 신속한 이관과 회수를 위해 부실채권 회수에 대한 세부적인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 5. 시사점

국내 NPL 시장은 경기 부진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으로 최근 큰 폭의 성장을 보여 왔다. 향후의 국내 NPL 시장 규모는 어떠할지 국내 경기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점진적인 경기 회복을 예상한다면 그 결과는 국내 은행이 쥐고 있다고 판단된다. 만일, 국내 경기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선택의 여지없이 국내 은행은 단기간 내에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자산건전성 지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 매각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점진적인 국내외 경기 회복을 예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국내 은행이 외부 매각방식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할 지 여부가 이 시장의 규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분방식으로 외부 매각의 비중이 25% 내외인 현 상황에서 국내은행이 자체적인 관리보다는 외부기관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NPL 시장은 경기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각 처분과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보 처분을 NPL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시장 규모는 지금의 2배 수준까지 가능하다. 이는 단기간 내에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그 잠재성을 본다면 NPL 투자시장을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마진 축소 등 핵심 수익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경기 회복으로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여유가 생긴다면 굳이 매각을 통해 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고자 하는 의지는 약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축소가 가속화될 위험도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국내 NPL 시장의 성장이 경기 불황, 제도적인 변화 등 외부적인 영향에 기인했다면, 향후에는 NPL 투자업체의 적극적인 영업과 부실채권 관리능력 향상이 시장규모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 경영진의 입장에서 자체적인 부실채권 처리보다 외부매각이 은행 수익성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지 않는 한 NPL 시장규모는 경기 회복시 다시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NPL 관련하여 최초 대출의 상담, 신용조사, 승인 신청, 대출 심사, 대출 실행, 회수 또는 부실 발생,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재정립하여 AI를 도입한 체계적 융복합 업무플로우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금융기관 간 무리한 경쟁을 지양하여 부실여신 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하며,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이루어져 한다. 부실여신이 발생되면 이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나 양성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미래를 향한 전반적인 금융기관의 경영전략의 재설계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 제4장 NPL 운용 및 관리 개선방안

### 제1절 해외사례 및 시사점

#### 1. 미국

미국은 2000년대 초 IT 산업붕괴, 9.11테러, 아프간/이라크 전쟁 등으로 경기가 악화되자 경기 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주택대출 금리 하락, 부동산 가격 상승의 부작용으로 2004년 저금리 정책이 종료되어 부동산 버블이 꺼지게 되고 저 소득자들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금리가 상승하게 되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져서 금융기관은 회수불능 사태에 직면하였다. 결국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증가하고 대형 금융사, 증권사들이 파산하게 되어 세계적 신용 경색을 가져오게 되었다.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화 금융상품 대부분이 부외경제(off-balance sheet)으로 편입되어 불투명하게 운용되었기에 이로 인한 추가부실에 대한 불안이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에 확산 되면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로 확대되었다.

대규모의 부실채권이 금융시장에 일시에 유입되자 미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설립 및 민관합동 부실투자프로그램(PPIP: 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채권 정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PPIP의 목적은 주택시장과 기업의 주요 유동성 공급원인 주거용모기지 담보증권(RMBS: Residential Mortgage Banked Secutity))과 상업용모기지 담보증권(CMBS: Commercial Mortgage Banked Security)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시장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PPIP는 미국 재무부의 승인 하에 민간투자자가 최대 5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개별 민관합동 부실채권투자펀드(PPIF: Public Private Investment Fund)를 설립하게 되며, 실제적인 운용은 PPIF 별로 실행하였다. 민간자본 출자액(75억 달러)에 상응하는 자본을 재무부가 지분 투자(75억달러)하는 한편 총 자본출자규모의 최대 100%(149억 달러)까지 재무부가 대출을 지원하여 최대 299억 달러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여력을 확보하였다.<sup>24)</sup>

## 2. 일본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장기간에 걸친 금융환화 정책과 금융자유화 등으로 일본 주가와 지가가 대폭 상승하자 일본 정부는 1989년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 금융 긴축과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시행하였고 이후 자산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1980년대 금융자유화에 따른 규제완화 등으로 금융회사 간 경쟁이 격화되자 은행들은 중소기업,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렸는데, 이는 1990년대 자산버블 붕괴 이후 부실채권 증가로 연결이 되었다.

1990년대 초 일본의 자산버블이 꺼지면서 은행의 대출채권이 부실화 되었고, 이후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어 금융부실 규모가 확대되었다. 90년대 초 부실채권 정리가 지연되면서 장기간 불황이 지속되자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많은 금융회사가 도산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1992년 8월 부실 부동산담보대출 매입을 위한 공적기구 설립을 제시하였으나 공적자금으로 민간은행을 구제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실행하지

24) 김진(2014), “부실채권(NPL) 투자현황과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제32권 제11호.



못하고, 1992년 12월 민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였다.

동경 소재 부실 신용조합 2곳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1995년 1월 AMC인 Tokyo Kyodo Bank가 일본은행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부실 신용조합들의 자산을 흡수한 후 1996년 9월 상호를 RCB(Resolution and Collection Bank)로 변경하였다. 1999년 4월 RCB와 부실화된 비은행 주택 담보대출채권의 매입을 위해 1996년 7월 설립된 주택금융채권 관리기구 HLA(Housing Loan Administration Corporation)가 합병되어 정리회수 기구 RCC(Resolution and Collection Corporation)가 발족되었다. 이는 일본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하였으며, 이전 기구들과는 달리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은행 등의 부실채권 매입이 허용되었다. 현재 RCC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부실채권 정리 목적을 보유한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업무는 2001년 4월 일본정부의 긴급 경제대책에서 채택되어 2001년 8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대손 처리 시 신탁업무가 인가되었다. 그 외에도 금융기능 강화법의 자본 증강 제도에 의거하여 금융회사 등예의 자금조달업무, 가교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3. 스웨덴

경기가 호황 국면이던 80년대 중반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규제철폐(1985년) 등으로 민간 자금수요가 증대되어 은행대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자금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으로 유입되어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하였다. 특히 외환시장 규제 완화(1987년) 및 해외차입 자유화(1989년)로 해외로부터 자본 유입이 증가되어 민간의 자금 여력이 확대됨에 따라 자산



가격 버블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중반 발생한 부동산 등 자산 가격 버블이 1989년 하반기 경기 과열 억제 정책에 따라 급격히 소멸되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한 대형은행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긴축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1989년 하반기 이후 자산 가격이 급락하여 대형은행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하였다. 1990년~1992년 중 부동산가격은 50%, 주가는 41% 하락하였으며,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급증하여 1992년 말 부실채권 비율(총여신대비)은 13.4%로 당시 미국 및 일본의 3.1%를 크게 상회하였다.

또한 은행들의 신용도 하락으로 해외차입이 부진하고 예금인출사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은행도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1991년 이후 저축은행인 Forsta Spar은행과 자산규모 상위원회 Nord은행, Gota은행 등이 차례로 도산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에 정부는 시장에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Nord은행(1992년 2월), Gota은행(1992년 12월)에 대해 국유화를 하였고, 1993년 5월에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정리 업무를 전담할 은행지원청(Bank Support Authority)을 설립하였다.

은행지원청은 부실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의 경우에는 정부 출자 및 지급보증을, Nord은행과 Gota은행 등 부실규모가 큰 경우에는 부실채권정리 회사를 설립하여 집중 지원하였다. 정부는 Nord은행에 대해서 1992년 11월 부실채권전담회사인 Securum을, Gota은행에 대해서는 1993년 11월 Retriva를 설립하는 한편, Gota의 우량자산 매각추진 실패 후 1993년 12월 Nord에 Gota를 합병시키고, 1995년 12월에 Securum과 Retriva도 합병하였다.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자 정부는 1996년 6월 금융기관 채무원리금 상환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중단하고 은행지원청을 해산하였으며 Securum은 1997년 해산하였다. 은행지원청을 해산하는 대신 예금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 4. 시사점

연구는 해외 사례와 국내의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부실채권에 대한 정책적 방안과 리스크를 극복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실채권의 운용 방안을 살펴보면 과거와 현재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부실채권 시장의 발전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민간 부실채권시장이 고도화된 미국의 경우 민관 합동의 부실채권 정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하에 민간투자자의 활발한 참여를 유인함으로써 유동화 시장 회복 및 금융위기 해결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PPIP는 공적 지원을 통해 민간의 활발한 부실채권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유동화 증권시장 회복 및 부실채권 정리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Black Rock, Alliance Bernstein등 대형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PPIP에 참여하면서 부실채권 시장에 긍정적인 평가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민간투자자 유치에 위해 민간 투자 대비 정부 지원 비중이 높아 이익 분배를 반씩 나누는데, 손실 발생 시에는 정부가 손실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구조적인 한계이다. 또한 손실 부담의 불 형평성 발생 및 민간 운영에 따른 리스크 수반 등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상존한다는 것이 미국 제도의 한계이다.

일본은 장기간 불황에 대한 은행의 대출채권이 부실화 되었고, 이후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어 금융부실 규모가 확대되자. 1996년 7월 설립된 주택금융채권 관리기구 HLA(Housing Loan Administration Corporation)가 합병되어 정리회수기구 RCC(Resolution and Collection Corporation)가 발족하여 예전과 달리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은행 등의 부실채권 매입이 허용되었다.



현재는 RCC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2001년 8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대손처리 시 신탁업무가 인가되었다. 그 외에도 금융기능 강화법의 자본 증강 제도에 의거하여 금융회사 등예의 자금조달 업무, 가교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1980년대 부동산 자산 가격 버블로 대형은행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하여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급증하여 은행도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정리 업무를 전담할 은행지원청(Bank Support Authority)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민간 부실채권 시장의 전문성과 인프라가 구비된 선진국에서 조차 위기 발생 시에는 시장 기능이 마비되어 민간 위기 대응 역량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투자심리 안정 및 신속한 부실 정리를 위해 공적 부실채권 정리가 필수이다. 또한 부실채권 유발자를 시장에서 분리하는 차원에서도 위기 해결을 위해 공적 부실채권 정리기능의 수행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위기는 주로 정책적으로 또는 시장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반면에 최근 위기는 민간의 무분별한 투기에 따른 시장균형 붕괴가 주요 원인으로 부실 유발자가 정리 주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발생할 위기는 복합적인 위기로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파급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대외 위기가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한 상시적인 대비태세 마련을 갖추어야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 과거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모두 외부로부터 위기 원인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정책적 차원에서 해외 부실채권 정리 방안을 연구하고 공조하면



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등 신흥 국가에 대한 금융시장 부실채권 증가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과거 금융위기 극복 경험을 보유한 국내의 노하우와 선진국의 부실채권 정리 방안을 토대로 위기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도 경기 과열 후 버블이 발생,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기업체 부도 증가, 은행의 담보가치 하락, 회수 불능, 부실채권 대량 발생, 정부 개입을 통해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정부자금 투입 등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결국 국민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 혼란과 국민 불편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경기 하락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 억제에 위해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와 제도 개선 효율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부실채권 관련 전문가 양성화 과정을 통해 경제위기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제2절 개선방안

### 1.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AI 기능 도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IoT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금융권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서비스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콜센터 직원 역할부터 고도화된 투자 전문가까지 AI와 빅데이터 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하고 많다.

Bank Of America, Wellsfargo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웹, 문자메시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채팅봇 등을 구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글로벌 IT기업





들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서비스 기술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날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권 AI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가. 제1금융권의 AI 진행상황

국내 제1금융권에서는 혁신 연구개발(R&D)센터에 인공지능 등을 연구 개발하는 셀(cell)을 신설, 여신심사 분야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탐지 앱과 같은 금융서비스에도 AI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의 피해 사례 제공에 따른 지속적인 딥러닝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AI 비서와의 대화를 통해 고객이 계좌 및 카드 이용명세, 펀드 수익률 조회, 간편 송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대화 방식으로 AI 기반 생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향후 고도화 작업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은 '리브똑똑'을 통해 채팅과 음성인식을 이용해 고객이 인공지능 비서와 대화하면서 계좌 및 카드 이용명세, 간편 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나. 보험업계 인공지능 콜센터 'AIA ON' 운영

AIA생명은 작년부터 SK(주) C&C와 함께 'AIA 온(ON)'서비스 개발을 시작하였고, 시범 서비스를 거쳐 최근 본격 서비스 런칭을 통해 고객서비스를 한층 향상시켰다.

AIA생명은 기존 콜센터를 대체하기 위함이 아닌 고객만족을 높이고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이를 위해 챗봇(Chatbot) 서비스와 인공지능 전화 응대 서비스 로보텔러(Robo-teller)를 구축하였다.

AIA 인공지능 챗봇은 고객과 채팅을 통해 상담하듯 일대일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AIA 온(ON)'서비스는 고객과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사람과 채팅을 하듯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



면 SNS를 통한 실시간 보험료 납입 이체도 가능하다.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고객이 보험 상품을 찾거나 상담 받기 편한 시간이 퇴근 후 저녁시간 혹은 주말이라는 점이다. 고객이 마음 졸이지 않고 편하게 보험 상품을 찾고 상담하기 위해서는 24시간 365일 콜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저녁과 밤, 새벽 사이에 'AIA ON'을 통해 고객은 편안하게 고객 응대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비대면 서비스를 점점 선호하는 고객의 성향 때문이다. 요즘은 식당과 영화관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키오스크나 음식 배달 앱을 통한 주문의 확대는 사람과 직접 이야기하거나 마주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고 싶은 고객의 성향 변화에 맞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AIA ON과 로보텔러를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해보겠다.

#### **다. 언제, 어디서나 고객을 만나는 에이브릴(AIBRIL) 인공지능**

##### **1) Happy Call 서비스 '로보텔러'**

AIA생명 '로보텔러'는 해피콜 업무를 맡고 있다. 해피콜은 고객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주계약과 특약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로보텔러'는 단시간에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통화가 가능하고, 상담원은 해피콜 결과에 따른 보완 업무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 효율과 업무의 효과성을 두루 갖출 수 있다. 이런 '로보텔러'는 에이브릴(AIBRIL)을 활용해 고객응대와 대화내용 데이터 처리가 한 번에 가능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 음성을 꾸준히 학습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모든 해피콜에 대해 통계와 빈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2) 친숙한 UI 카카오톡 챗봇 'AIA ON'

AIA생명 챗봇 'AIA ON'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언제,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에이브릴(AIBRIL) 서비스의 강점은 챗봇 대화모델을 한 번만 세팅하면, 웹,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AIA생명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페이지, 카카오톡에서 모두 'AIA ON'을 만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편리한 방법으로 상품정보를 받거나 필요한 서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편리한 지문인증으로 보험료 납부도 가능하다.

'AIA ON'은 에이브릴(AIBRIL) 챗봇 서비스를 기반으로 일반 답변부터 기업 맞춤형 대화모델 개발, 고객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고도화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Conversation API는 고객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적합한 답변을 전달하고, 통계 분석과 학습데이터 제공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는 상담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금융 서비스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함으로써 AI 잠재력을 통한 서비스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 비대면 채널 확산에 따른 고객접점 확보 차원에서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바람이 불고 있다.

상기 언급한 AI 기능을 응용한 업무처리 개선은 다음의 네 가지와 같다. 첫째, 은행의 대출 상담과 대출 심사시 기존의 부실채권 발생과 관련된 각종 유형별 사례를 데이터화 및 체계화하여 이를 여신의 최초 시작 부분인 대출 상담시 전산으로 화면에 나타나게 하여 부실대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며, 다음 <그림 1>과 같이 대출 심사시에도 이를 적용하여 영업점에서 간과한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부실채권 사례를 걸러지게 자동화를 도입한다면 부실채권의 발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원천 억제할 수 있다. 현재는 관련 규정과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건별로 수작업으로 확인하며 처리



하고 있어 대출 업무에 익숙지 못한 직원이 처리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 불황, 예측하거나 또는 예측하지 못한 부실채권 발생 상황은 AI 적용 프로세스와 별도로 본사 정책부서에서 문서로 공지하고 있어 AI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그림 1> 대출 상담과 심사시 AI 적용 프로세스



자료: 연구자 작성

둘째, 여신의 최초 상담, 신용조사, 여신 심사, 대출 실행, 담보 관리, 부실채권 관리에 대하여 AI 기능을 도입하여 1개 차주의 여신에 대하여 대출 실행부터 담보물 관리, 최종 상환일 까지 일관되게 이력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여 부실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모든 정보를 부실채권관리자에게 자동적으로 업무가 연결되게 하고 부실채권 발생 시 채권회수 여부 및 금액을 상담자 및 심사역이 알 수 있게 한다. 현재는 부실채권에 대하여 매각되었는지 상각되었는지 정보가 없다.

셋째, 현재는 대출상담부서, 담보관리부서, 신용조사, 심사, 부실채권관리 등이 각각 다른 부서와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이를 AI 기능을 도입한 워크플로우에 따라 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하면 부실발생 차주에 대한 이력 관리와 분석이 일관되게 가능하여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현재는 부실여신 발생 시 별도의 부서와 별도의 담당자가 취급하여 업무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넷째, 부실채권 관련 각종 데이터를 AI를 통해 수집시 신용평가기준, 재무상황, 담보현황, 대표자 또는 차주의 거래기간 및 신용도, 금융기관 차입금, 영업이익, 매출증가 추이, 현금흐름 추이 등 각종 Data와 함께 융합되게 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산정하여 체크리스트와 함께 접목시켜 업무방향과 할 일을 제시하게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다.

## 2. 전문 인력 양성 및 NPL 자격증 제도 도입

여신 상담과 신용조사, 담보물 평가, 부실여신 발생 시 기초적인 사후관리는 일선 영업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용조사와 담보물 평가 일반영업점에서 기업여신을 담당하는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직원은 많지 않고 자주 담보가치를 실제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평가하거나 부실발생 초기에 선제적 조치 기회를 잃게 되어 보다 큰 부실과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금융기관 내부적으로는 신용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증 취득 독려, 연수기회 부여, 지속적 직원 역량 강화, 신용조사 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원 충원 등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여신 담당자에 대한 신용조사 자격증 취득 시 인센티브 부여, 지속적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거액대출 차주에 대한 신용조사는 일반 영업점에서 기본적인 재무제표만 입력하고 본부에 의뢰시 심사역이 신용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전문적 심사와 신용조사가 병행되어 업무량 과다로 인해 실질적 심사에 소홀하게 되어 결국 부실여신이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

주요 은행 여신 전문 인력 현황을 보면 다음 <표 14>와 같이 00은행의 경우 신용분석사 512명, 여신심사역 86명 등 경쟁은행 대비 중간 수준이다.



<표 14> 주요 은행 여신 전문 인력 현황

(단위: 명)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CRA	
A은행	663	A은행	188	00은행	55
B은행	530	C은행	163	D은행	53
00은행	512	B은행	105	E은행	37
C은행	468	00은행	86	A은행	23
D은행	413	D은행	56	B은행	21

자료: 금융연수원(2015)

대출 심사의 경우는 금융기관 별로 가계, 중소기업, 대기업, 특수여신, 국제여신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심사역들이 배치되어 대출 심사를 전문적으로 하지만, 보다 중요한 신용조사의 경우 비전문적인 영업점 인력이 재무상황 등을 입력하고 있으며 거액 여신 대상 본부 신용조사의 경우 대출 심사역이 심사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별도의 전문 인력과 전문 부서가 없어 정확하고 공정한 신용조사가 어려우며 여신감리부서에서 대출 실행 후 신용조사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00은행의 여신관련 주요자격증(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CRA) 보유자는 다음 <표 15>와 같이 대상 인원 205명중 100명으로 105명이 자격증이 없다.(CRA와 여신심사역은 신용분석사 자격증 보유해야 취득 가능하므로 산정인원에서 제외) 이는 전체 51% 수준이다.



<표 15> 부서별 주요 자격증 보유 현황

(단위: 명)

부서명	총대상자	신용 분석사	여신 심사역	CRA	비고
개인심사부	34	11	(6)	(3)	
중기업심사부	77	41	(12)	(1)	
대기업심사부	33	20	(12)	(4)	
여신관리부	3	-	-	-	
기업개선부	37	16	(6)	(3)	
기업금융부	21	12	(5)	(1)	
합계	205	100	(41)	(12)	

자료: 00은행(2016)

또한 최근 3년간 신용분석사 신규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6>과 같이 00은행은 2018년 기준 38명으로 경쟁은행 282명 대비 ▲244명 부족한 상황이다.

<표 16> 최근 3년간 신용분석사 신규 취득 현황 비교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계
00은행	49	44	38	131
A은행	258	356	282	896
A은행대비 GAP	▲209	▲312	▲244	▲765

자료: 금융연수원(2018)

00은행의 총 인원중 신용분석사 자격증 보유자는 다음 <표 17>과 같이



589명으로 총 인원 대비 5.4% 수준으로 낮다.

<표 17> 직무별 신용분석사 자격증 보유 현황

(단위: 명)

구분	총인원	자격증보유	비중	비고
중소RM	992	116	11.7%	
기업RM	85	18	21.2%	
심사역	175	117	66.9%	
일반직	9,697	338	3.5%	
계	10,949	589	5.4%	

자료: 00은행(2018)

둘째, 금융권 공통으로 대출관련 자격증은 다음 <표 18>과 같이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CRA가 있지만 NPL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격증은 없어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하는 자격증인 NPL관리사(가칭)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표 18> 여신 관련 주요 자격증 비교표

구분	자격기준	시행기관	업무(실제)	주요내용	관련근거
신용관리사	국가공인민간자격	신용정보협회	채권추심	· 부실채권 사전예방, 부실 발생 시 사후관리 담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신용상담사	상동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문제상담	· 신용문제의 예방 및 악화 방지 · 신용문제 해결을 통한 부채문제 연착륙 유도 상담	
금융채권관리사	상동	한국금융채권협회	채권관리업무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 문제로 사전/사후적 관리 - 사전: 거래처 신용조사, 담보물 자료요청, 법률 검토 - 사후: 채권추심, 채무자 재산조사 및 변제독촉	1회 142명 2회 226명 3회 123명 4회 134명
신용분석사	상동	한국금융연수원	기업신용분석	· 기업의 신용을 분석, 신용등급 결정 ·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전문가	
여신심사역	상동	한국금융연수원	기업대출승인 여부 결정, 심사	· 기업의 신용상황 및 사업성 분석을 통해 대출실행 결정 · 신용분석에 따른 대출승인 결정	
CRA (신용위험분석사)	상동	한국금융연수원		·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사, 평가하고 신용위험을 측정, 관리하는 업무	

※ 여신관련 자격증 경로(신용분석사 취득후 여신심사역 취득, 최종 CRA 취득)

신용분석사

→

여신심사역

→

CRA  
(신용위험분석사)

NPL관리사 (가칭)	(신설)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예방업무</li> <li>· 경매</li> <li>· 부실채권 매각 및 상각업무, 회수</li> <li>· 부실채권 투자</li> </ul>	(신설)
----------------	------	------	------	---	------

자료: 연구자 작성



NPL관리사(가칭)는 부실 예방업무, 부실채권 매각 및 상각 업무, 회수업무, 부실채권 투자 등에 관하여 국가공인민간자격증으로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여 각종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수교육, 취업안내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실채권 전문가 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보다 선진화된 NPL 관리기법과 분석기능을 도입하여 추후 부실발생을 예방하고 부실채권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3. 매각 및 상각 리뷰 강화

자산유동화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저당채권과 같이 유동성은 떨어지나 재산적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ABS는 SPC가 발행한 것으로 채권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자산보유자(금융기관 등)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산을 유동화 하는 이유는 자산 보유자의 파산 위험으로부터 자산만을 분리하여 자금을 조달하므로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경우 위험자산을 매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BIS 자기자본 비율 개선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NPL 시장의 확대로 신속하게 매각 및 상각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고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실채권의 질은 NPL 투자업체의 수익성과 유동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실채권 매입가격 대비 높은 가격에 빠른 회수가 가능하다면 그 자산의 질은 좋다고 말할 수 있다. 높은 가격은 NPL 투자업체의 수익성에, 빠른 회수는 자금유동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부실채권 매각은 자산유동화 법률에 따르고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



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는데, 매각 규모와 대상 등을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정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 처리하고 있다.

상각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에 의거 처리를 하는데,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전체 대상 건을 취합, 분류하여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러한 매각과 상각은 금감원의 규제를 받지만 과도한 신청과 이에 따른 손실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익성과 직결된 매각 및 상각은 다음 <표 19>와 같이 부실채권에 대한 적립금인 대손충당금 규모를 은행별로 비교하여 유추할 수 있다. 국내은행은 부실채권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많아 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표 19> 주요 은행 대손충당금 현황

(단위: 십억원)

은행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00은행	영업이익	1,270	1,790	2,415	
	대손충당금	1,784	1,614	1,412	
	<b>비중</b>	<b>140%</b>	<b>90.2%</b>	<b>58.5%</b>	
A은행	영업이익	1,720	2,044	2,834	
	대손충당금	1,324	1,375	1,517	
	<b>비중</b>	<b>76.9%</b>	<b>62.3%</b>	<b>53.5%</b>	
B은행	영업이익	1,189	2,644	3,017	
	대손충당금	1,671	1,448	1,599	
	<b>비중</b>	<b>140%</b>	<b>54.8%</b>	<b>53.0%</b>	
C은행	영업이익	1,418	2,539	2,691	
	대손충당금	1,284	1,202	1,114	
	<b>비중</b>	<b>90.5%</b>	<b>47.3%</b>	<b>41.4%</b>	

자료: 은행연합회(2019)

미국 주요 은행의 경우 <표 20>과 같이 대손충당금이 영업이익에 비해 크지 않아 수익성이 높다.



<표 20> 미국 주요 은행 대손충당금 현황

(단위: 십억원)

은행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Bank of New York	영업이익	4,297	4,675	7,165	해당 연도 말 대미환산 매매기준을 적용 환산
	대손충당금	525	1,146	3,142	
	<b>비중</b>	<b>12.2%</b>	<b>24.5%</b>	<b>43.8%</b>	
JP모건	영업이익	67,193	68,684	86,270	
	대손충당금	6,444	5,644	5,426	
	<b>비중</b>	<b>9.6%</b>	<b>8.2%</b>	<b>6.3%</b>	

자료: Investing.com

결국 부실채권을 줄여야 대손충당금도 줄고 매각 및 상각도 줄어 순이익을 많이 실현할 수 있어 부실채권은 수익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분기 말, 기말, 연말 등에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낮은 가격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기도 하는데 손실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와 같은 철저한 사전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첫째, 매각 및 상각 금액과 처리내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피드백으로 과도한 매각 및 상각 처리를 억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을 제3의 특수목적 기구에 양도함으로써 대차대조표상 자산 매각분을 자산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매각 대금을 받음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sup>25)</sup>

그러나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과도한 매각 및 상각은 지양되어야 한다. 2018년 주요 은행별 매각 및 상각 현황은 <표 21>과 같이 총 대출 중 매각 및 상각 비중이 하위 0.26%에서 0.48%까지 분포한다.

25) 이영준 외 2인(2015), 『NPL의 정석』, 매일경제출판사.



<표 21> 2018년 주요 은행 매각 및 상각 현황

(단위: 십억원)

은행구분	총대출	매/상각			비중	비고
		매각	상각	계		
00은행	226,737	201	481	682	0.30%	2위
A은행	226,827	630	467	1,097	0.48%	1위
B은행	268,774	195	533	728	0.27%	3위
C은행	222,043	208	366	574	0.26%	4위

자료: 00은행(2018)

둘째, 중소기업 부실채권의 매각 및 상각 비중이 높아 대출 심사시 더욱 정교한 심사가 요구된다. 다음 <표 22>와 같이 차주별로 매각 및 상각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실채권 발생 방지와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22> 2018년 주요 은행 차주 구분별 매각 및 상각 현황

(단위: 십억원)

은행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공공/기타	계
00은행	매각	30	137	33	1	201
	상각	56	247	178	-	481
	계	86	384	211	1	682
A은행	매각	35	500	80	15	630
	상각	18	247	200	2	467
	계	53	747	280	17	1,097
B은행	매각	12	141	42	-	195
	상각	30	206	297	-	533
	계	42	347	339	-	728
C은행	매각	13	182	13	-	208
	상각	71	163	132	-	366
	계	84	345	145	-	574

자료: 00은행(2018)



셋째, 총대출 금액에 대한 연체금액은 다음 <표 23>과 같이 중소기업, 가계, 대기업, 공공기타 순으로 나타나는데 연체율과 매각 및 상각은 거의 비슷한 추이로 움직이므로 역시 연체발생 억제와 사후관리 철저 및 정교한 심사가 중요하다.

<표 23> 2019년 4월말 주요은행 차주별 연체 현황

(단위: 십억원)

은행구분	총대출	차주별 연체금액					연체율 (%)	비고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공공기타	계		
00은행	231,209	20	325	409	57	811	0.35	
A은행	233,576	42	348	319	24	733	0.31	
B은행	270,459	5	334	434	1	774	0.29	
C은행	226,676	34	453	218	4	709	0.31	

자료: 00은행(2018)

특히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연체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부실채권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분별한 가계여신과 중소기업대출 확대 정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재고가 필요하다.

#### 4. 부실채권 관련 영업점 성과평가 개선

금융기관 중 특히 은행의 경우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뱅크의 출현으로 영업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수익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파생상품, 방카슈랑스, 외환상품, 신탁상품, 해외영업망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거액 부실여신 발생 시 해당기관 이미지와 손실에 따른 영업력 위축과 피해의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영업점 평가기준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의 두 가지와 같다.

첫째, 평가를 위한 지표항목에는 손익, 비이자수익, 여수신 총량, 평잔, 말잔, 신용카드, 아파트관리비, 인터넷뱅킹, 신규고객, 방카슈랑스, 펀드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평가를 위한 지표가 있다. 그러나 부실여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체비율 등의 지표가 있으나 주로 연체율과 연체에 따른 미수이자 차감(손익감소분)에 따른 점수 차감 등이 있다.

부실여신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부실여신 발생 시 징벌적 점수 차감대신 신속한 부실여신 이관과 회수에 좀 더 많은 점수비중을 두어 효율적이고 전문적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표 24> 00은행 영업점 성과평가기준표

현행	개선	비고
연체비율, 자산건전성	연체비율, 자산건전성	
	부실대출 이관 및 회수	

자료: 00은행(2019)

둘째, 자산건전성 항목을 정교하게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나 예금보험공사의 감독기관에서 NPL 또는 연체비율 평가는 연체여부 및 연체기간의 산정, 연체 정보는 자산건전성 분류의 원칙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이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서는 연체여신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①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여신
- ②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 ③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미납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여신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여신 등 세 가지 정의에 따라 약정만기일에 원금 또는 분할상환금이 상환되지 않거나, 이자미납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여신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이며, 해당여신은 그 익일부터 연체여신으로 분류된다.





## 제5장 결론 및 요약

금융기관은 일반 예금관리와 여신 지원, 수출입 업무 등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경제 활동과 국내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듯 경제에 영향력 있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건전하고 경쟁력이 있는 부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은 지속적인 영업수익 확보와 사고예방 활동 강화와 리스크 방지가 중요하다. 특히 예상치 못한 거액 부실여신이 발생하게 되면 BIS 자기자본비율과 대외신인도 및 평판 하락,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부실여신은 수익지표를 악화시켜 경영 전반에 부담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투입, 영업점 통폐합, 인원감축과 강화된 경영지표 관리를 통해 불이익이 확장된다. 또한 금융기관 부실화로 인해 고객예금 지급 불능의 사태에 직면하는 최악의 결과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실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과 경영 상태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확보하려면 영업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실여신의 선제적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실채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와 같이 부실채권 개념의 정립과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과 부실채권의 종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요인으로서는 대출 관련 관리 시스템의 비효율과 금융기관간 무리한 외형 경쟁, 전문인력 부족, 금융기관의 경영전략의 부재, 정



부 주도의 운영 체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순환적 원인, 과다 경쟁과 비효율적 정부 통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립과 발생원인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 부실채권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은행이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 제도인 대손충당금 적립방법, 대손상각, 부실채권 매각대상 자산선정 방법 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부실채권이 발생 시 국제입찰, ABS 발행, 자산관리회사의 합작설립, PEF/CRV로 매각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가격으로의 효율적 매각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손상각이나 부실채권 매각대상 자산 선정 방법에 대한 세심한 기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생략한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 매각 후 ABS 발행, 경매, 회수 등에 관한 부분인데 이유는 시중에 많은 책자가 출판되어 있고 NPL 경매, 실제 투자부문에 대한 설명은 개인의 자산 축적과 수익 확보를 위한 부문이어서 본 주제와 상이하여 생략 하였으며,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부실채권 발생 원인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방법, 업무처리 개선 등에 집중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한계는 연구 주제 보다 광의 개념인 부실채권 매각 관련 자산관리회사 운영관리, 부실채권 시장의 세부구조 및 문제점, 실질적 부실채권 투자방법 등에 대하여는 언급만 하였으며, 주로 금융기관의 내부적 운용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개선방안에 있어 AI 기능을 도입한 융복합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실제 세부 업무추진 위한 설계자가 아닌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출이 발생하여 부실채권 발생하기까지의 내용과 부실채권 발생의 주요 원인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향후 AI와 무인점포, 인터넷은행 등의 확대로 인해 고객이 금융에 접촉



하는 컨택 포인트와 처리 방식의 변화가 예상되어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상담과 신용조사, 담보관리, 부실채권 관리 등에 있어 AI 기능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 시스템 관리로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금융 환경을 만들어 국민과 기업이 안정적이고 편리한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관심을 갖고 제도와 프로세스 개선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저서)

- 김동희, 2018, 『적은 돈으로 부자 되는 지분경매 완성과 NPL투자비법』, 채움과 사람들
- 이영준 외 2인, 2015, 『NPL의 정석』, 매일경제신문사

(논문)

- 강희경, 2007, “국내 NPL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하나금융연구소
- 강경규, 2006, “한국의 부실채권 정리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부동산학 석사학위논문
- 김 진, 2014, “부실채권(NPL)투자현황과 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제32권 제11호
- 김하중, 2015, “금융기관 부실채권 관리방안-NPL과 경매 비교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맹효, 2002,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연구-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부실채권 정리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학위논문
- 신세덕, 2015, “NPL(부실채권)의 현황과 과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학위논문

(정부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3
- 예금보험공사, 2018.10, 리스크리뷰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dic.or.kr/>)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b.or.kr>)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NAVER 홈페이지 (<https://www.naver.com/>)

Google 홈페이지 (<https://www.google.co.kr/>)

